

지역 발전 계획

제1차 국가 균형 발전 계획(2004년)	제1차 지역 발전 계획(2009년)	제2차 지역 발전 계획(2014년)
기능 분산형 균형 발전 - 세종시 건설 -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건설 - 4 + 9 지역 전략 산업 육성	5 + 2 광역 경제권 -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 -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건설 - 광역 경제권 인재 양성 - 30대 선도 프로젝트 발굴, 추진	지역 행복 생활권 -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 -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체계 정비	지역간 연계 발전 필요성 제시	지역의 주도적 발전 환경 조성

지역 발전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2004년 제정)이 규정한 법정 계획으로 2009년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초기 균형 발전 계획은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 청사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산 배치하기 위한 행정 복합 도시 및 혁신 도시 건설로 구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했다.

2009년 수립된 제1차 지역 발전 계획은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간 연계 및 협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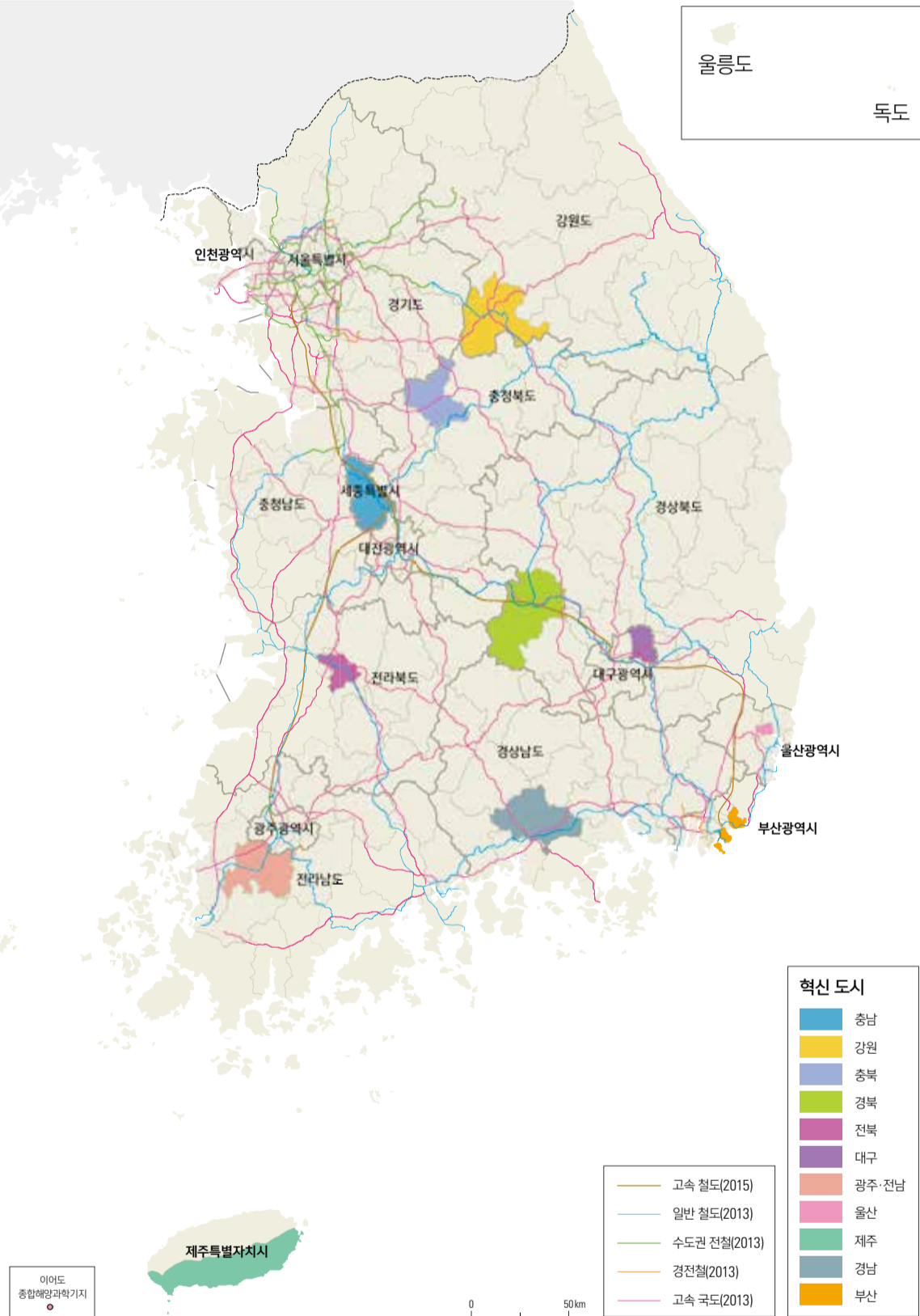
혁신 클러스터, 인재 양성 센터 등 지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광역권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선도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2014년 수립된 제2차 지역 발전 계획은 2013년 발표된 지역 희망 프로젝트(HOPE)에 따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주도의 상향식, 맞춤형 부처 협업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계획의 전략 사업들을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제1차 국가 균형 발전 계획(2004년) 중 혁신 도시 건설 계획

충남 혁신 도시(행정 중심 복합 도시)

- > 연기 공주 지역 729km²
- > 23개 정부 소속 기관 이전
- 12개 위원회, 11개 내부 조직 성격 기관
- ▶ 12개 위원회
 - 소장사무위원회, 공직자관리위원회, 무역위원회, 교원소장사무위원회, 전기위원회, 중앙환경분청조정위원회, 산재보상보형사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훈사무위원회
- ▶ 11개 내부 조직 성격 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제심판원, 항공안전본부, 경합통사사무소, 우주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17개 정부 출연 정부 기관 이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대기환경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역농촌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공공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 > 6개 공공 기관 이전
- ▶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립대학과, 경찰대학, 경찰청학령학교, 국립특수교육원



충북 혁신 도시

- >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명동면 일원 6.9km²
- > 11개 기관 이전
- 정보 통신, 인력 개발, 과학 기술 관련 기관
- ▶ 정보 통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인력 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경우학교원, 법무수원
- ▶ 과학 기술-서비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고용정보원

전북 혁신 도시

- > 전주시 만성동, 중동, 원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9.91km²
- > 12개 기관 이전
- 농업 생명, 지식 서비스 관련 기관
- ▶ 농업 생명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생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 ▶ 지식 서비스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기타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광주·전남 혁신 도시

-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7.3km²
- > 15개 기관 이전
- 전략 산업, 정보 통신, 농업 관련 기관
- ▶ 전략 산업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전력거래소
- ▶ 정보 통신
 -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직업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농업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유통교육원
- ▶ 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대학교직업전문교육단

제주 혁신 도시

- > 서귀포시 시호동 일원 1.13km²
- > 9개 기관 이전
- 국제 교류, 교육 연구 관련 기관
- ▶ 국제 교류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제주도재단
- ▶ 교육 연구
 - 국립제주대학교,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제주도재단
- ▶ 국제 교류
 - 국제청주유류연구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 ▶ 공공 업무
 -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항공교육센터

경남 혁신 도시

- > 진주시 호반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사리-속사리 일원 4.1km²
- > 11개 기관 이전
- 주택 건설, 관광, 문화, 산업 지원 기능 관련 기관
- ▶ 주택 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 ▶ 산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 ▶ 기타
 -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 혁신 도시

-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km²
- > 13개 기관 이전
- 관광, 생활 건강, 자원 개발 관련 기관
- ▶ 관광 기능
 -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 건강 생활 기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심사자, 보훈복지의료공단
- ▶ 자원 개발 기능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 ▶ 공공 서비스
 -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사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북 혁신 도시

- > 김천시 울주읍 일원 3.7km²
- > 12개 기관 이전
- 첨단 과학 기술과 교통 관련 기관
- ▶ 도로 교통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 ▶ 농업 지원
 - 국립수목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목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 ▶ 기타
 -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본부, 조달품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청기상통신소

대구 혁신 도시

- >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4.2km²
- > 11개 기관 이전
- 산업 진흥, 교육, 예술, 가스 산업 관련 기관
- ▶ 산업 지원
 - 산업기술발전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 ▶ 교육 학술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 기타
 -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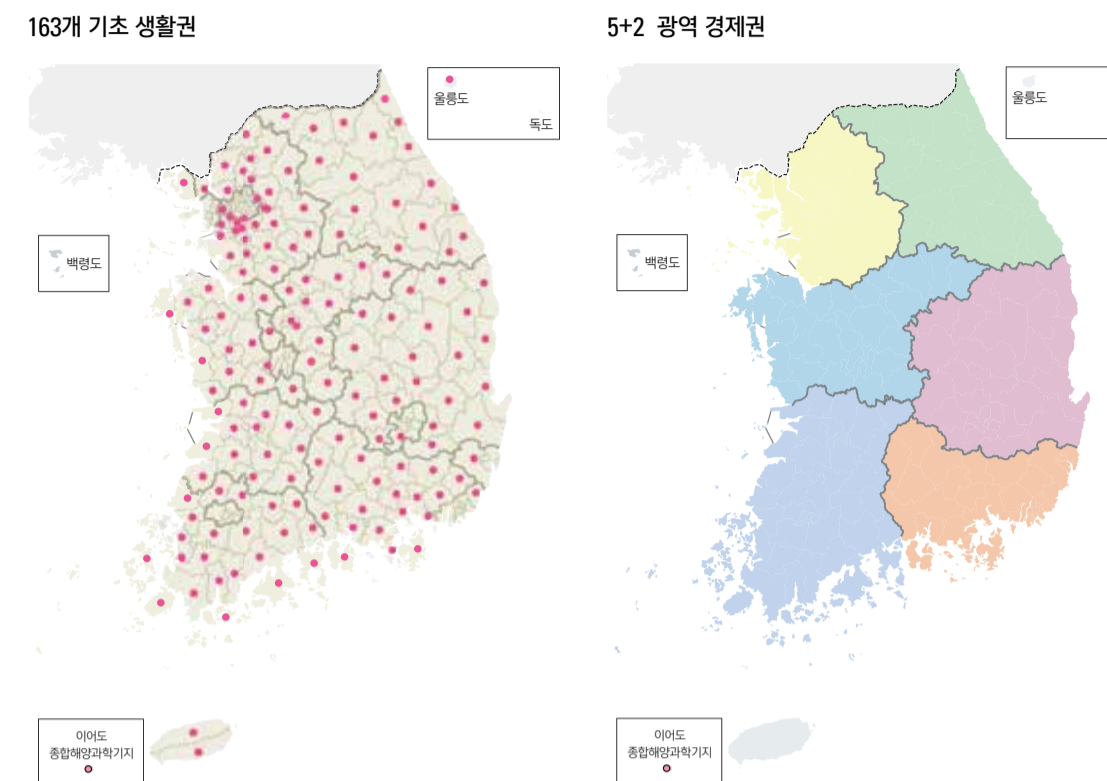
울산 혁신 도시

- >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 3.0km²
- > 10개 기관 이전
- 에너지 산업, 근로 복지, 산업 안전 관련 기관
- ▶ 에너지 산업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주)
- ▶ 근로 복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기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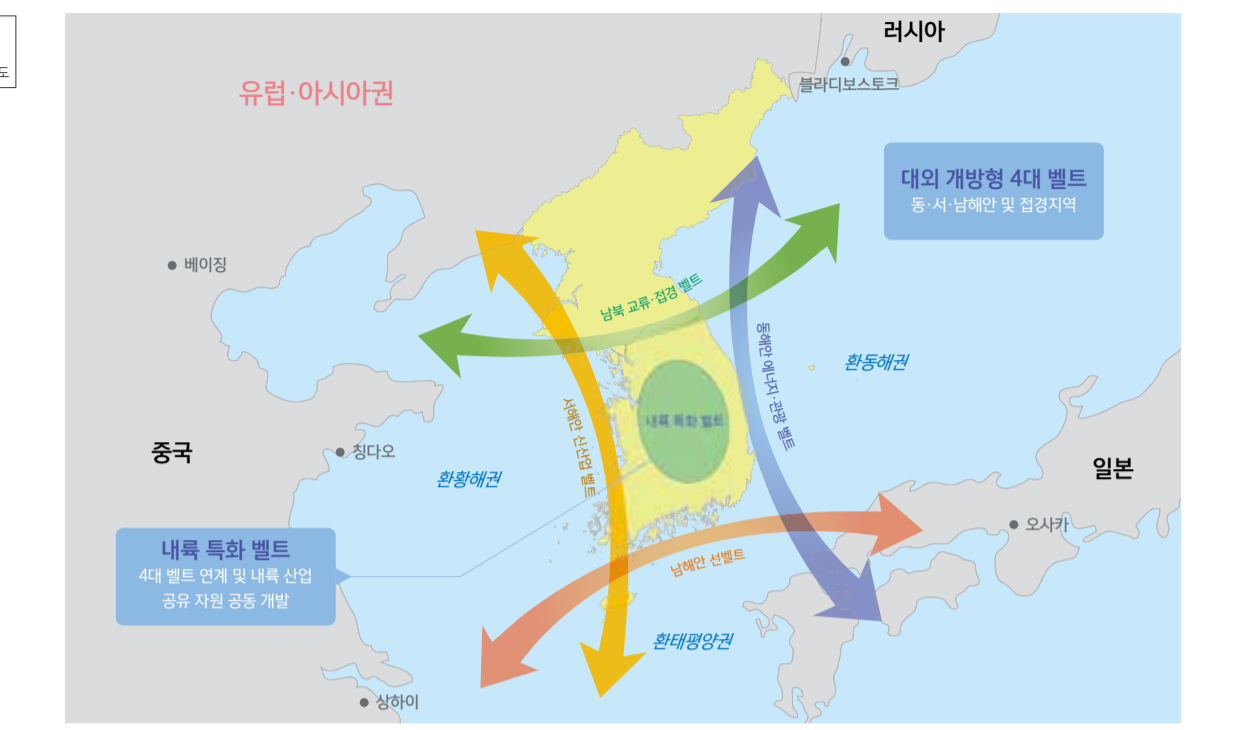
부산 혁신 도시

- > 동상구, 문정구, 서천구, 대연구
- > 13개 기관 이전
- 해양수산, 금융 산업, 문화 관련 기관
- ▶ 해양수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금융 산업
 - 한국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 문화 진흥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 ▶ 기타
 -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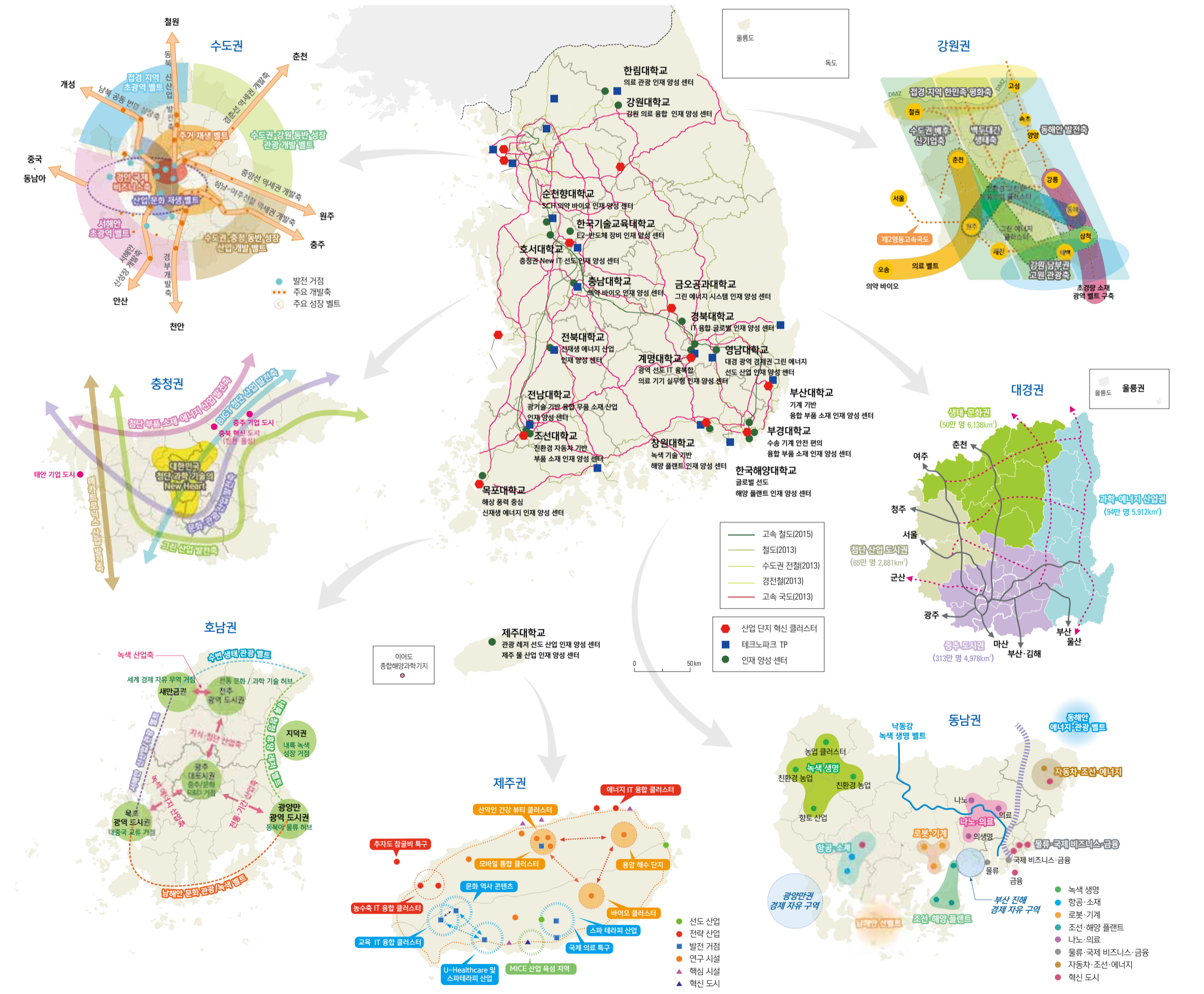
제1차 지역 발전 계획(2009년) 163개 기초 생활권



초광역 개발권



5+2 광역 경제권 구상-인재 양성 센터 및 산업 거점 조성



제2차 지역 발전 계획 분야별 과제(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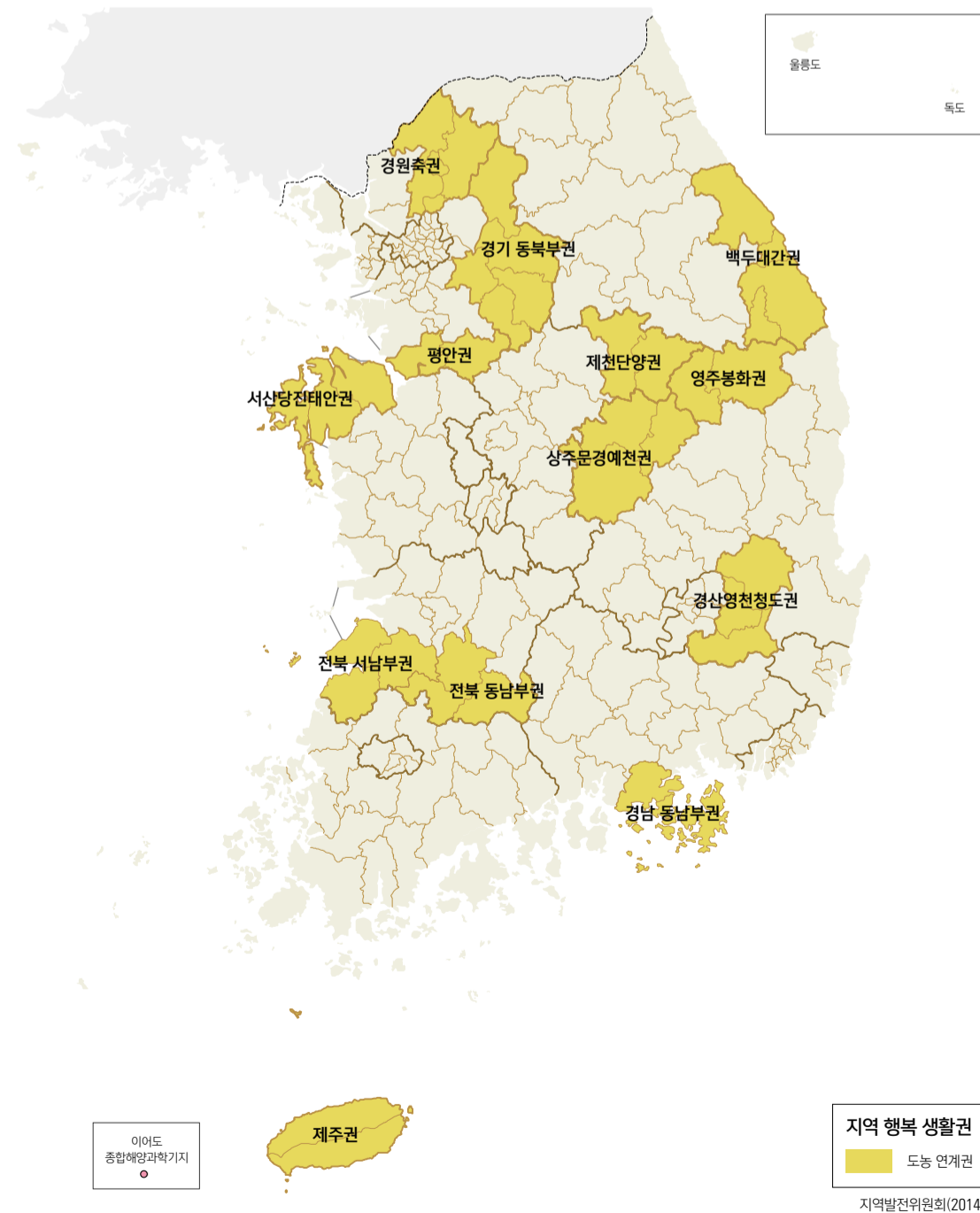
분야	실천 과제	주관 부처	협업 부처
지역 행복 생활권 활성화	지역 주도 협력 사업 확충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국토교통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 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지역 투자 촉진 기반 확대	중소기업청 등	국토교통부
	산업 단지 고도화로 창조 경제 구현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 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 경제 지역 확산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 교육·물류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 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 학습 체계 구축	교육부	-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	-
	맞춤형 문화 서비스를 통한 문화 격차 해소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관광 산업 육성	-	해양수산부 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주민 일차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 취약 지역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지역 행복 생활권은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으로,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간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총 5개 분야의 각 사업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이 느끼는 사업의 체감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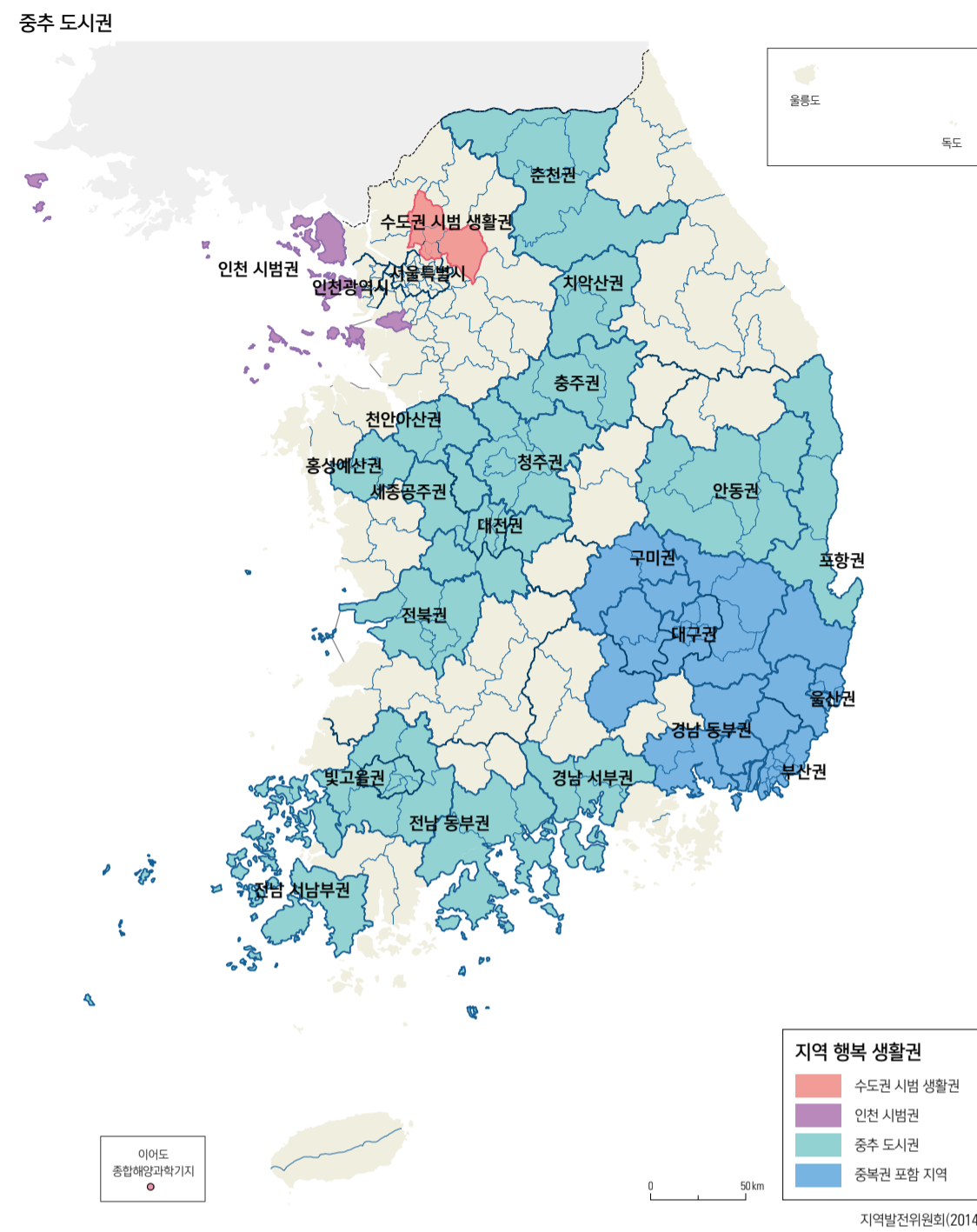
지역 행복 생활권은 도시의 경제권을 고려한 중추 도시권, 도시와 농촌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 도농 연계 생활권, 농어업에 기반한 농어촌 생활

권으로 나뉘며, 특정 시군구는 여러 생활권에 걸쳐 중첩될 수도 있다. 이는 교통의 발전으로 다핵으로 확장하는 광역 도시권의 등장을 고려한 것으로, 각 행정 서비스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권역에 포함된다. 제2차 지역 발전 계획은 목표 연도인 2018년에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정하여 시·도별로 해당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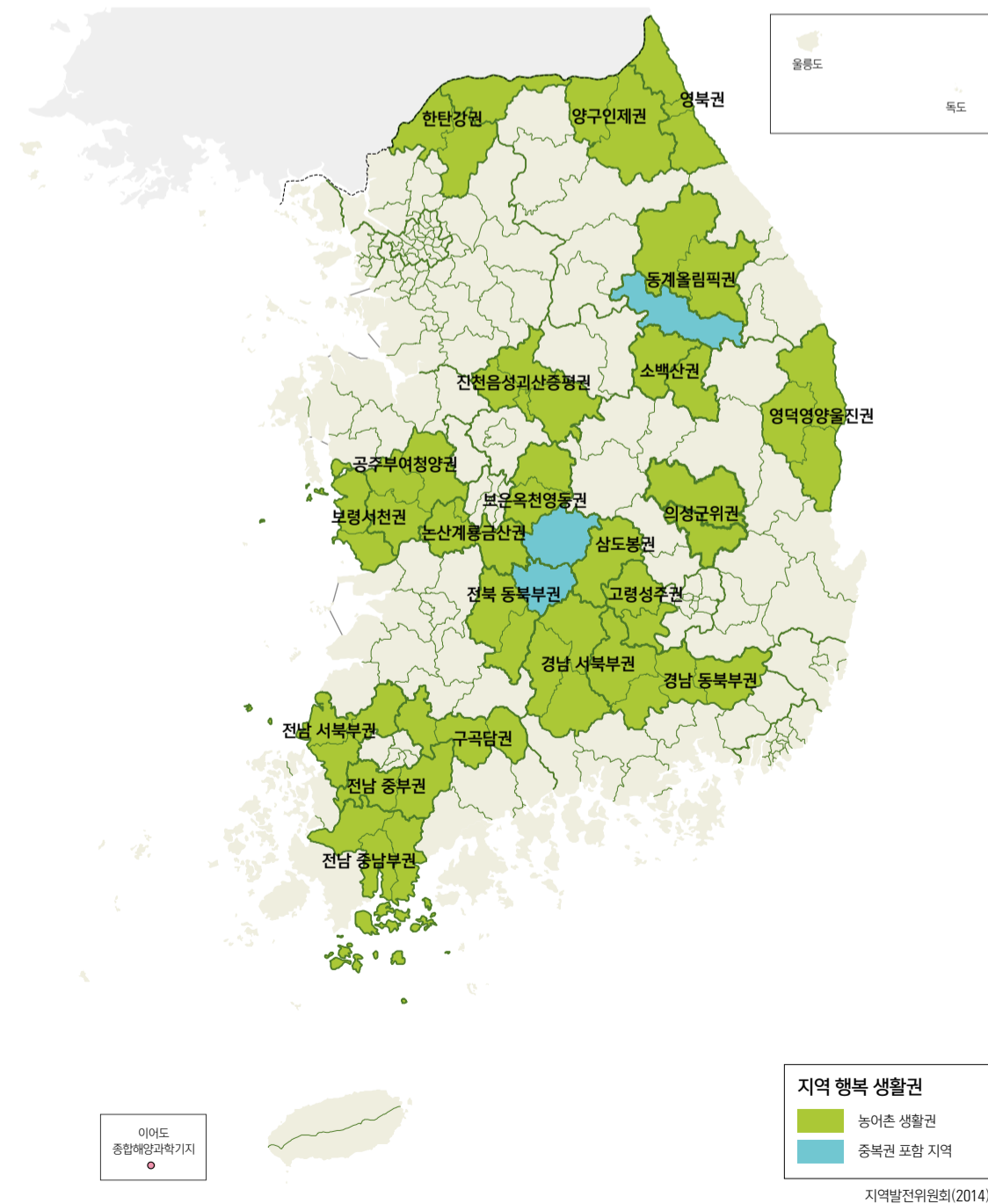
도농 연계 생활권



지역 행복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지역 특화 프로젝트

인천 비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서비스 산업 전략 거점으로 육성

- 송도 글로벌 캠퍼스 2단계 구축
- Smart MICE 복합 지구 추진
- 외국 유수의 교육 연구 기관 유치 등

경기 비전

DMZ 일원의 생태, 역사, 문화, 안보, 관광 자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생태 문화 관광의 메카로 육성

- 예기봉 평화 생태 공원 조성
- 파주 수리예코터운(습지 체험 학습원, 독계다리 스카이라인) 건립 등

강원 비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오래-건강하게-아름답게' 사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건강 생명' 산업 육성

- 웰씨에이징 기업 입주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및 투자 유치
- 웰씨에이징 제품(식이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상품화 지원

충북 비전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목표로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칼 허브 구축 추진

-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원형지 개발을 통한 연구 인프라 구축
- 국제 바이오 엑스포,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등 행사 개최
- 줄기세포 재생 센터 운영 지원 등

경북 비전

창조 경제 실현의 핵심 기반인 IT 융복합 분야의 창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창출

- IT 융복합 핵심 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IT 융복합 상용화 지원 센터 및 테스트베드 조성
- 유망 ICT 중소기업 창조 생태계 조성

대구 비전

지역 IT/SW를 기반으로 한국 SW 산업의 획기적 도약 (Quantum Jump)을 선도하는 SW 융합 거점 도시로 육성

- SW 융합 기술 지원 센터 및 ICT 융합 벤처 센터 건립
- SW 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 콘텐츠 상용화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대전 비전

국방 산업의 신산업, 신시장, 신서비스 창출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창조 경제 실현

- 국방 기업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한 산업 단지 조성
- 군 보유 기술 사업화 지원
- 첨단 국방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충청권 국방 산업 로드맵 마련

전북 비전

농생명 융복합 분야를 특화한 대표적인 창조 경제 성공 모델로 육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

-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 민간 육종 연구 단지 조성
- 식생활 교육 연구 센터 지원 등

광주 비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육성

- 3D 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
- 문화 전당 주변 공백지 활용 문화 예술 마을 조성
- 아시아 음식 문화 지구 조성

제주 비전

환향 경제권의 발전과 국내외 해양 관광객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동북아 해양 문화 관광 거점 조성

- 기업 도시 진입 도로 개설
- 항공 레저 장비 산업 육성
- 육상도 공항 건설 등

제주 비전

세계 최초 용암수 산업을 1차 산업+제조+헬스케어+관광과 융합하여 제주 창조형 산업으로 육성

- 용암 해수 산업 단지 확장 및 기업 유치
- 용암수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부산 비전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영상 산업을 고도화하여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 기반 조성

- 영화 영상 산업 인프라 조성(영화 제작 생태계 및 글로벌 융합 촬영소 조성)
-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타 산업과의 ICT 융복합화를 통해 글로벌 창조 지대 조성

경남 비전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인 항공 산업을 고도화하여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조 경제 기반 조성

- 항공 산업 특화 단지 조성 및 투자 유치
- 항공 부품 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항공 인력 양성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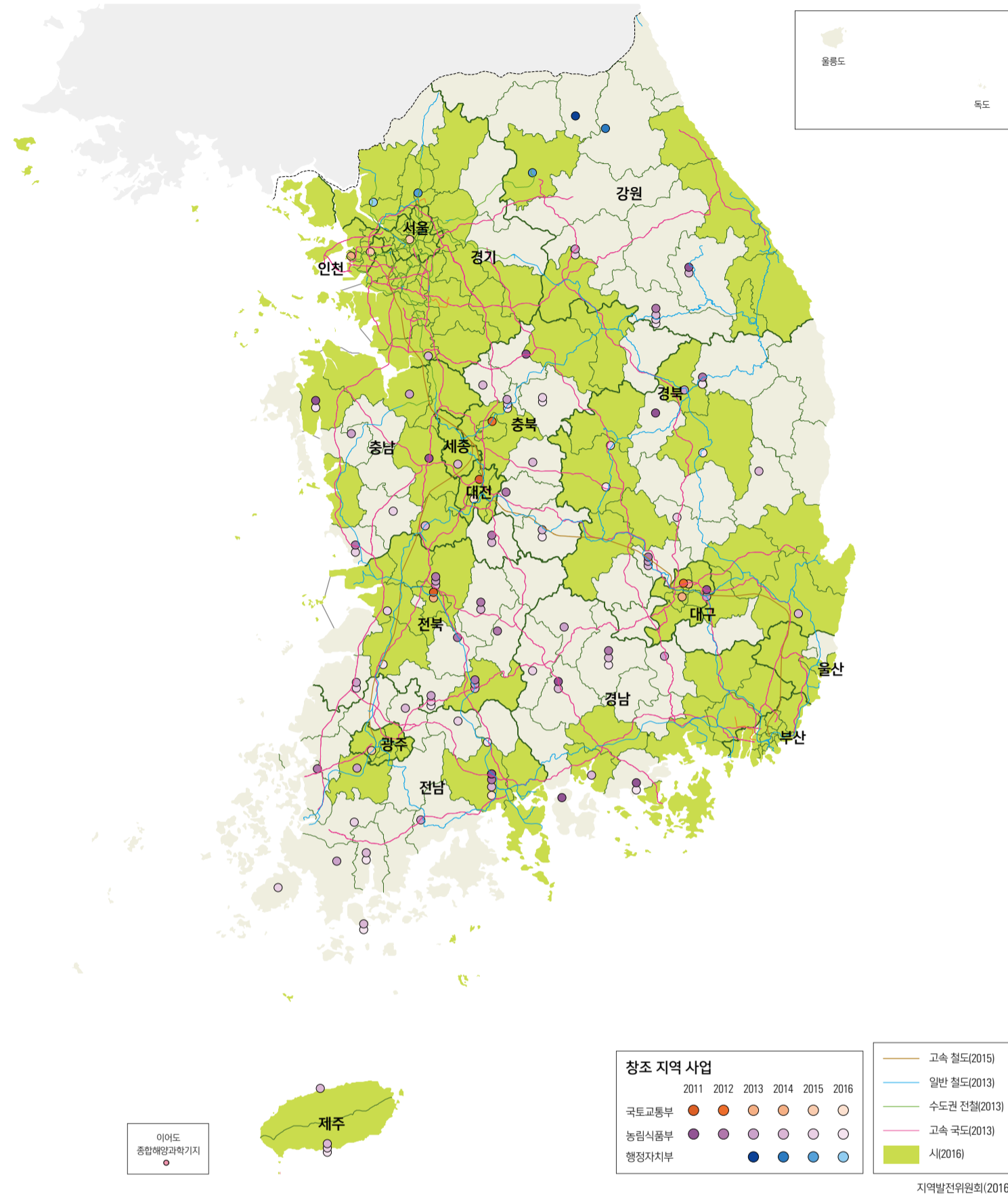
지역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비전 및 발전 전략 부합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시·도별 총 15개의 사업, 80개의 세부 사업 과제를 확정하였다. 지역 특화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 및 지

역 발전 계획을 시·도별 계획과 통합하여 지역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사업 효과와 도모하고자 했다.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성, 미래의 산업 발전 가능성을 기초로, 국가를 대표하는 시·도별 특화 사업

15개를 선정하였고, 지역 산업 발전이 고용 창출 및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6개의 경제 협력 사업인, 63개의 주력 산업 지원 체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 전통 사업, SW 사업, 혁신 도시 연계 지역 산업, 지역 거점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증가와 생산액 증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의 거점 개발을 통한 경제 산업 중심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창조 지역 사업



창조 지역 사업(2011 - 2016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3	16	18	27	21	19
서울특별시					1	
대구광역시		1	1	1		
광주광역시				1	1	
대전광역시	1					1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도				1	2	1
강원도	1	1	2	3	3	1
충청북도	1	2	1	3	2	3
충청남도	2	2	2	2	2	1
전라북도	1	5	5	3	3	2
전라남도	2	2	3	4	3	4
경상북도	2	2	2	3	2	3
경상남도	3	1	2	3	1	2
제주도				2	1	1
국토교통부	2	2	2	2	3	2
농림축산식품부	11	14	15	24	16	16
행정자치부	0	0	1	1	2	1

지역발전위원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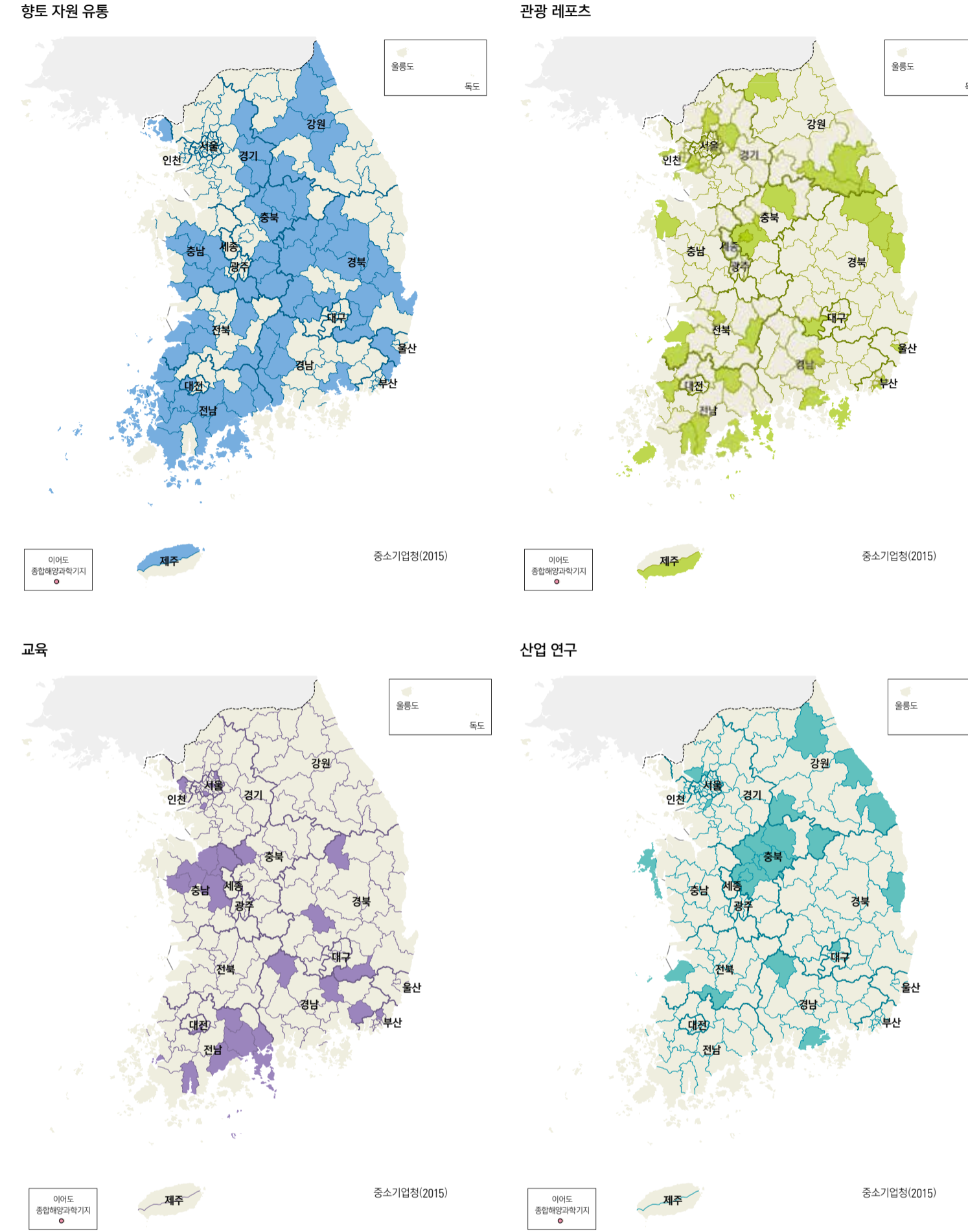
지역발전위원회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창조 지역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첫 사업이 지원된 이후 각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편성한 사업을 매년 10여 개씩 지원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역 거주자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 고유형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 창조 지역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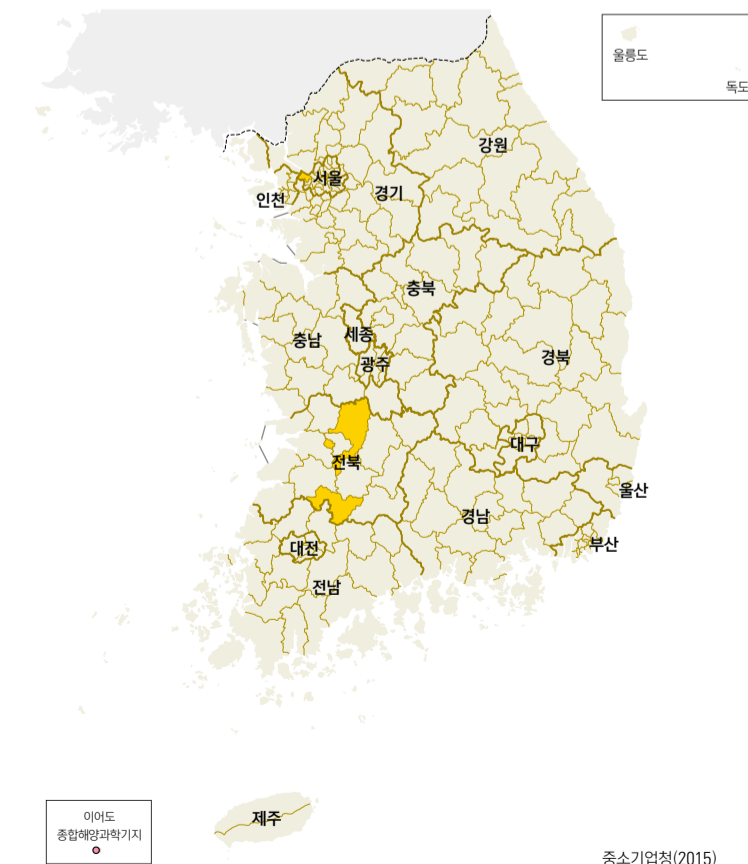
시·군·구	주관 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경기도 파주시	행정자치부	법원을 오감 만족 화합 및 만들기 사업	집창촌을 재창기하여 전통 등가(빛 물레길)와 전통등 전시관 조성, 장단공 두부촌 조성 등
강원도 영월군	농림축산식품부	영월 장물방이 5일장 육상 사업	장물방이 시장 순례 행사, 5일장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통 시장 노후 환경 개선 등
대전광역시 서구	국토교통부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 갑천 만들기	갑천누리길 스트리밍 및 디자인 개발, 갑천누리길 조성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충청북도 영동군	농림축산식품부	금강과 함께하는 상도 삼미 삼락 사업	특산물로 음식 체험 상품, 디지털, 도시락 개발, 3개 군 연계 푸드 투어 시범 코스 개발
충청북도 증평군		도깨비 이야기 확산 만들기	도깨비 관련 체험 학습장, 활동 무대, 놀이터 조성, 혼장 양성, 구멍가게 설치 등
충청북도 괴산군		한국형 창조 농업 개발 사업	미선나무를 활용하여 잠잠배추 및 미선프크 개발, 미선나무 재배 전업농 육성 등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 예술 향기를 머금은 솔마당 창조 마을 만들기	노인 대상 사진 동아리, 마을 디자인 대학, 사진관 카페 운영 등
전라북도 정읍시		음식 창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 문화 재생 플랫폼 구축	한국 속박 및 전통 문화 체험, 토속 음식 판매(할머니 부엌), 지역민 수공예 교실 및 장터 운영, 문화 축제, 전통주(양주) 복원 및 상품화 등
전라북도 순창군		동네 목수 양성소(마을 건축 학교)	마을 건축 학교 운영(체험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등
전라남도 강진군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하모니 어울마당(음악 축제) 개최, 하모니 버스킹(이동 음악회), 강진시장 내 라디오 방송국 운영, 하모니 음악 센터 조성 등
전라남도 구례군		아생의 배움을 빛기다. 아생화 오감 만족 프로젝트	아생화 체험 및 탐사 프로그램 운영, 아생화 재배 및 상품화 지원, 꽃·나무 양식 육성, 아생화 전문 인력 양성, 아생화 전시회 등
전라남도 완도군		섬, 주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주민 공동체 '완도 섬 여행 토크'	섬과 섬을 잇는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주민, 관광객과의 쌍방향 여행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전라남도 순천시		국토교통부	생태 창조 체험의 매카, 유유낙학 힐링길 만들기
경상북도 안동시	농림축산식품부	백화 마을 재생 프로젝트-날아라! 달동네	할매네 백화점(실버 프리마켓) 운영, 할매 연극단 구성 운영, 지역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북도 상주시		느림의 미학 국제 슬로시티 '상주 명주 전승 및 명품화 사업'	상주 명주 전통 기법 육성 전승, 명주짜기 실습장 건립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주 한복 패션쇼, 명주 테마 관광길 조성 등
경상북도 봉화군		천년의 숨결을 되살린다! '중앙목 나무사랑 학교' 운영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 생활 목공 지도자 양성 등
경상남도 고성군		공룡 콘텐츠를 활용한 활력 넘치는 공룡나라 만들기	공룡 인형극 제작공연, 공룡 콘텐츠 상품 개발 등
경상남도 합천군		전국 유일의 '대령 군물' 농촌 전통 문화 콘텐츠 사업	'군물' 복원 및 재현, '군물'을 활용한 공민-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술 연구, 스토리텔링 개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rchtrail -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 기행	건축 기행 운영, 건축 기행 네트워크 구축, 건축 기행 상품 개발 등

지역발전위원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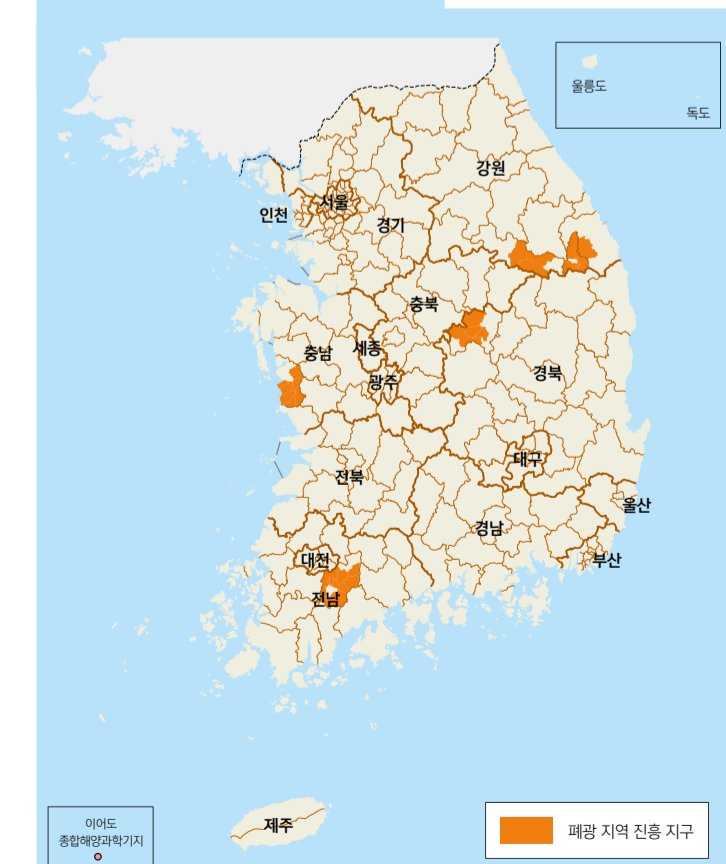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의료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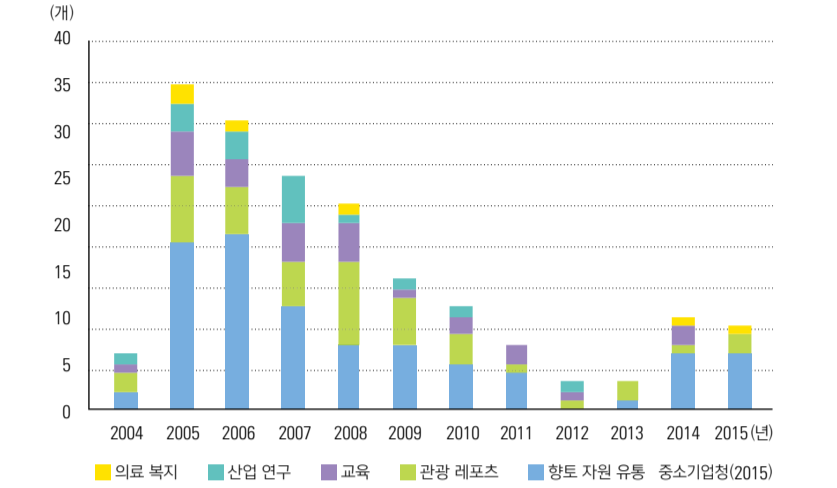


패방 지역 진흥 지구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자치 단체의 자발적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화된 개발 전략을 수행하는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근거하며,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사전 모델 없이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차별화된 특화 사업의 발굴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추이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규제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며, 지역의 중소기업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특구는 항토 자원 유형, 관광 레포즈, 교육, 산업 연구, 의료 복지의 5개의 유형으로 구별되며 지방 자치 단체 및 중소기업청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발전 특구

구분	항토 자원 유형	관광 레포즈	교육	산업 연구	의료 복지	합계	특구 관할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수
합계	84	40	27	17	4	172	131
서울	1	2	4		2	9	8
부산	1	3	2			6	6
대구	1			2		3	2
인천	1	1	1			3	3
광주	1		1			2	2
울산	1	1				2	2
경기	4	4	1	3		12	11
강원	6	4		3		13	12
충북	9	3	1	2		15	11
충남	12	1	4	1		18	12
전북	6	4		2	2	14	10
전남	18	7	7	1		33	20
경북	17	5	3	1		26	20
경남	5	3	3	2		13	10
제주	1	2				3	2

중소기업청(2015)

석탄 중산에 따라 탄광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탄광 지역의 기반 시설 부족과 탄진 등에 의한 생활 환경의 열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5년부터 광산 근로자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국고 보조로 추진했으나, 1987년 이래 석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탄광 지역의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지역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석탄 산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탄광 지역 진흥 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 5월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등 4개 시·군이 진흥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탄광 지역 진흥 계획(1992 - 1996년)에 따라 크게 기반 시설 확충, 대체 산업 육성, 생활 환경 개선 부문에 대한 지역 진흥 사업이 추진되었다. 탄광 지역 진흥 사업에 이어 1995년 「패방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패방 지역 진흥 지구가 지정되었다. 동 법은 패방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는 「산림법」, 「환경 영향 평가법」 등의 적용이 완화되고, 개발이나 대체 산업 창업이 지원된다.

연구 개발 특구 사업은 과학 기술 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 개발 견인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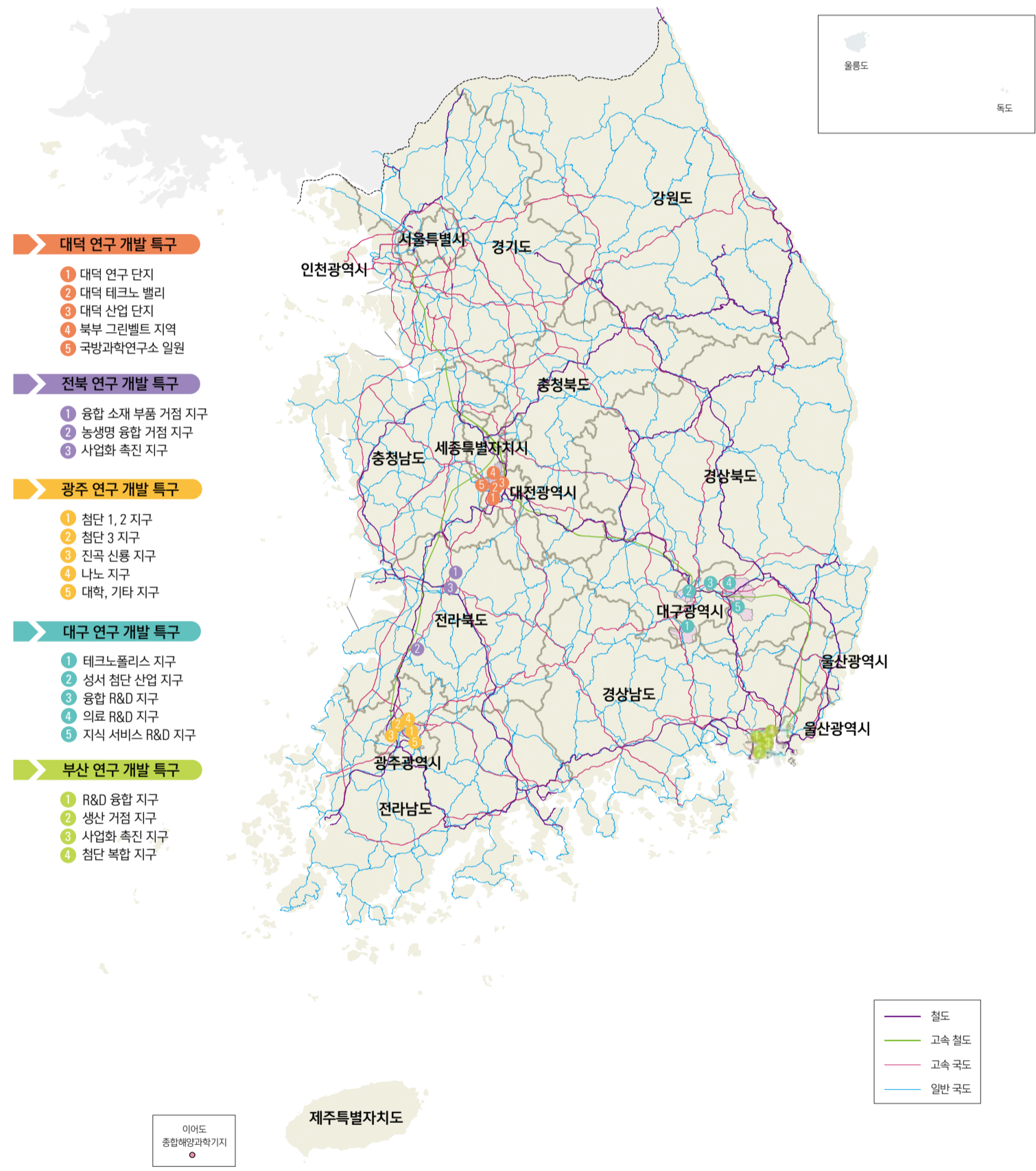
1970년대 대덕 연구 단지를 조성하면서 시작된 연구 개발 특구는 1980년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입주하면서 연구 기반이 확충되었다. 1990년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입주하고 대림산업연구소, 호남석유화학 연구소 등 민간 기업 연구소가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산학연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3년 참여 정부의 동북아 연구 개발 허브의 구축 구상과 대덕

연구 단지 설립 30년이 결부되어 연구 개발 특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으며, 이는 2005년 「대덕 연구 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 대덕 연구 단지(27.8km²), 대덕 테크노 벨리(4.3km²), 대덕 산업 단지(3.2km²), 북구 그린벨트 지역(28.6km²), 국방과학연구소 일원(3.9km²) 등 총 67.8 km²를 대덕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32개 법정동이 포함되었다.

연구 개발 특구 사업 2차 계획으로 2011년부터 전국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하였다. 광주, 대구(2011년), 부산(2012년), 전북(2015년) 연구 개발 특구를 추가하여 현재 총 5개의 연구 개발 특구가 지정되었다.

연구 개발 특구 현황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지정 연도	2005. 07	2011. 01	2011. 01	2012. 11	2015. 07
범위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광주시 광산구, 동구,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전북 진주시, 완주군, 정읍시 일원
면적	총 67.8km ²	총 18.7km ² (광주 15.0km ² , 장성 3.7km ²)	총 22.2km ² (대구 16.2km ² , 경산 6.0km ²)	총 14.1km ²	총 15.9km ²
특화 분야	IT 융복합 바이오 메디칼 나노 융합 정밀 기기	광기반 융복합 바이오 소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IT 융복합 의료 기기 융복합 그린 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 해양 플랜트 기자재 그린 해양 기계	농생명 융합 산업 융복합 소재 부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5)

1970 - 1979 인 프 라 조 성 기

1980 - 1989 연구 기 반 확 충 기

1990 - 1999 혁신 장 출 기

2000 - 혁신 클 러 스 터 형 성 기

2010 - 혁신 클 러 스 터 도 약 기

- 1970 · 국가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1973 · 대덕 연구 학원 도시 건설 기본 계획 수립
- 1974 · 대덕 연구 단지 기반 조성 및 연구소 건설 착수
- 1980 ·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입주 시작
- 1981 · 대덕 연구 학원 도시 건설 기본 계획 수립
- 1986 · 대덕 연구 단지 대전시 편입
- 1990 · 민간 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연 연계 토대 마련
- 1992 · 대덕 연구 단지 조성 준공
- 1993 · 대덕 연구 단지 관리법 제정
- 2000 · 과학 기술 네트워크 및 연구 개발형 혁신 클러스터 창조
· 대덕 벨리 신도시 및 첨단 기업 입주 개시
- 2004 · 대덕 연구 개발 특구 육성 방침 결정
· 대덕 연구 개발 특구로의 도약기
·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첨단 기술 사업화를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
- 2005 · 「대덕 연구 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대덕 특구 출범 및 특구 지원 본부 설립
- 2010 · 한국형 사이언스파크 모델 글로벌화
· 대덕 테크비즈 센터(TBC), 융합 기술 연구 생산 센터(CTCC) 등 기술 사업화 인프라 구축
·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기
·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
- 2011 · 제2차 연구 개발 특구 육성 종합 계획 수립, 광주 특구, 대구 특구 추가 지정
- 2012 · 대덕 연구 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 연구 개발 특구 진흥단 기관 명칭 변경 및 부산 특구 추가 지정
- 2013 · 대덕 연구 개발 특구 40주년 기념 행사
- 2015 · 전북 특구 추가 지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5)

지역 산업 정책은 크게 지역의 산업 기반 시설 건설과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의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차 산업 사업체 수는 2008년 각각 159,860개, 2,072개에서 2012년 184,545개, 6,854개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 환경에 종속되어 있으며, 지역의 중추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는 시기별로 달라져 왔다. 2012년에는 전략, 특화, 선도 산업으로 구분하였고, 2013년에는 신흥과 선도로 구분하였으며, 2014년에는 신흥과, 선도, 경제 협력권, 전통 사업으로 구분하는 등 시기별 현안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행정 구역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변화하는 경제권을 고려하지 못했고, 동시

에 지역 거점을 형성했던 산업 단지들이 노후화되어 행정권 중심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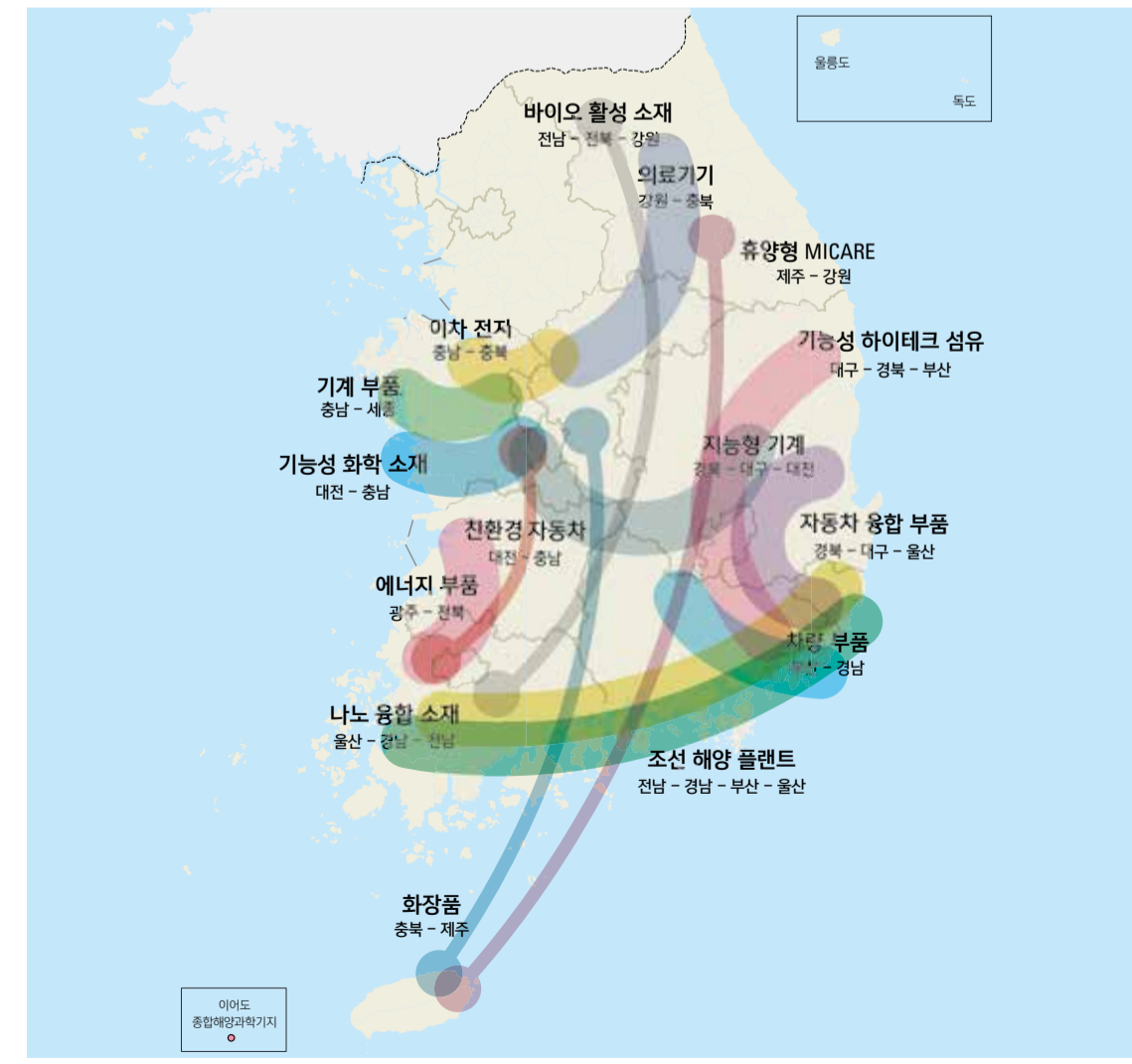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 정부의 지역 산업 정책은 첫째,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사업 집행, 둘째, 지역 주도-중앙 지원의 협력, 셋째, 지역내 산업 지원의 종합 전략 작성이란 원칙에 따른 지역 산업 발전 계획(2014 - 2018년)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주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사도의 63개 주력 사업, 39개의 협력 사업, 39개의 연구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실제 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사도간 협력 수요에 기반하여 행정 구역 기준을 벗어난 지역 산업 육성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 협력권을 설정하였다.

지역 산업 지원 사업의 변천 과정

구분	1999 - 2002년	2003 - 2007년	2008 - 2012년	2013 - 2016년
지역 간			1단계 광역 선도 사업 (총 9,182억 원)	2단계 광역 선도 사업 (총 1조 599억 원) 경제 협력권 사업 (총 3,382억 원)
시·도	4개 지역 1단계 1999 - 2003년 (총 7,022억 원)	4개 지역 2단계 2004 - 2008년 (총 9,498억 원)	9개 지역 1단계 2002 - 2007년 (총 7,407억 원) Post 4·9 지역 전략 사업 (총 1조 5,999억 원)	신흥과 주력 산업 (총 5,000억 원) 주력 산업 (총 4,201억 원)
시·군·구			지역 특화 산업 2004 - (총 9,933억 원)	지역 연고 산업 (총 1,715억 원)
광역 거점				광역 거점 기관 지원 사업 (총 3,73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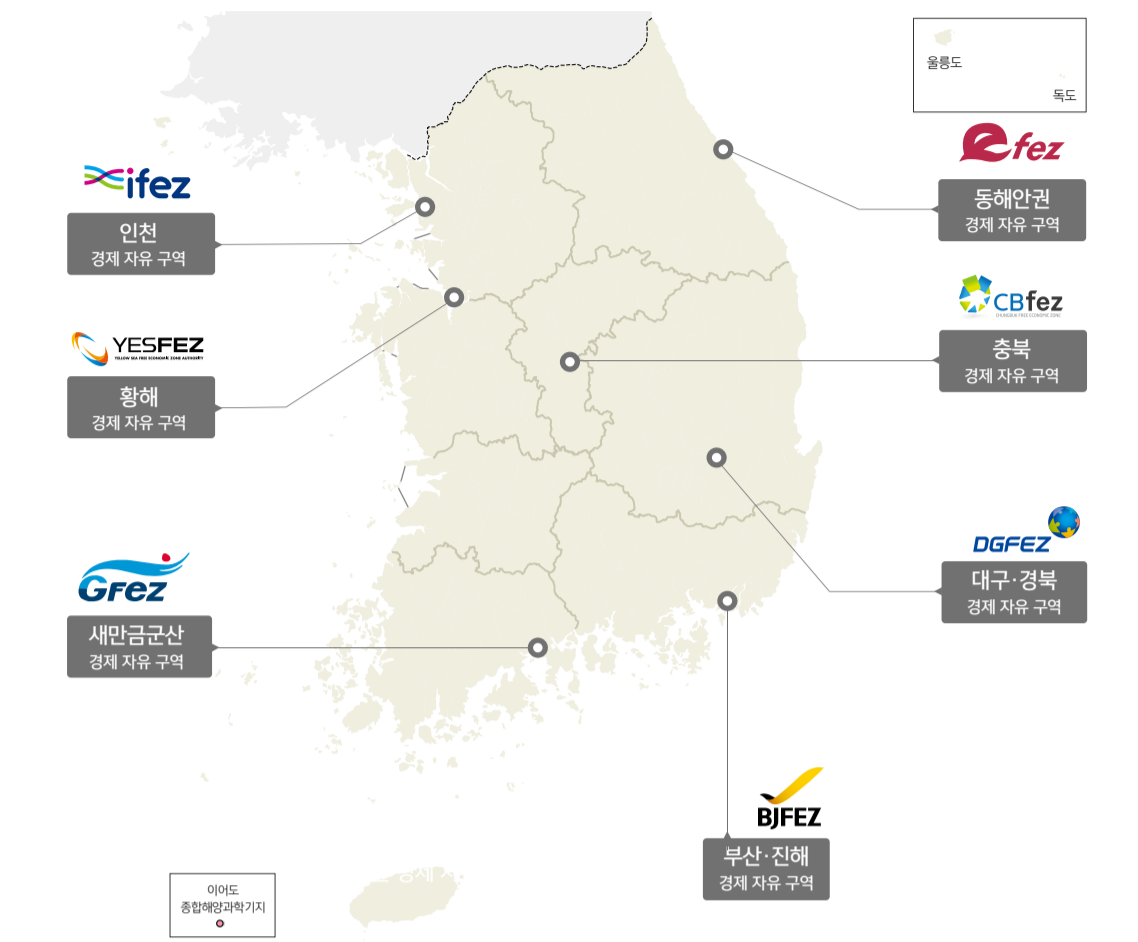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2015)

경제 협력권 배치도



산업통상자원부(2015)

경제 자유 구역



경제 자유 구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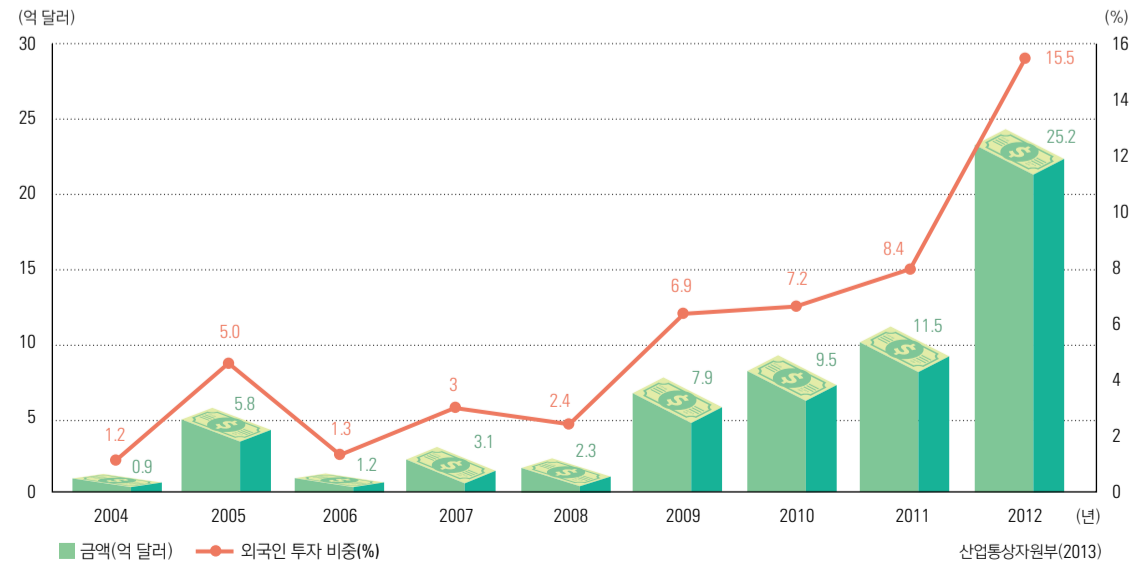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사업 기간	면적 (km ²)	계획 인구 (만 명)	총사업비 (조 원)	기투자금(조 원)			합계	지구 수
						국고	지방	민자		
1차 (2003년)	인천	2003	170	63.9	78.02	0.30	2.73	42.90	45.93	27
	부산-진해	-	83	18.9	11.85	0.56	0.32	4.28	5.16	21
2차 (2008년)	광양안면	2020	85	7.0	12.38	0.80	0.66	1.50	2.96	23
	황해	2008	15	7.0	4.70	-	-	-	-	5
3차 (2013년)	대구-경북	-	30	9.2	7.89	0.17	0.08	2.00	2.25	10
	세만금-군산	2020	50	3.2	5.24	0.91	0.00	0.19	1.10	4
합계			450	110	121.39	2.74	3.79	50.87	57.40	98

산업통상자원부(2013)

경제 자유 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 해, 광양안면 4개 권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2년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 자유 구역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가 부여된다. 2003년 인천, 부산, 진

해, 광양안면 4개 권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2년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 자유 구역법)으로 격상하였고, 2015년 12월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안면, 황해, 대구-경북, 세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에 지정되어 있다.

경제 자유 구역 외국인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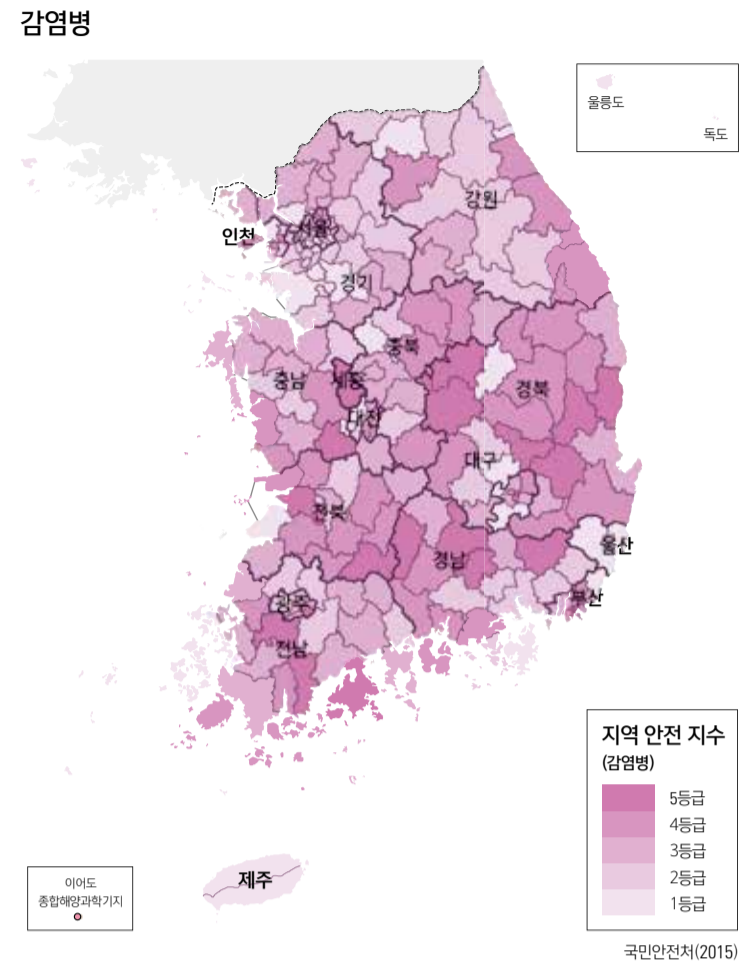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2013)

안전한 국토 조성

지역 안전 지수 분야별 1등급 지자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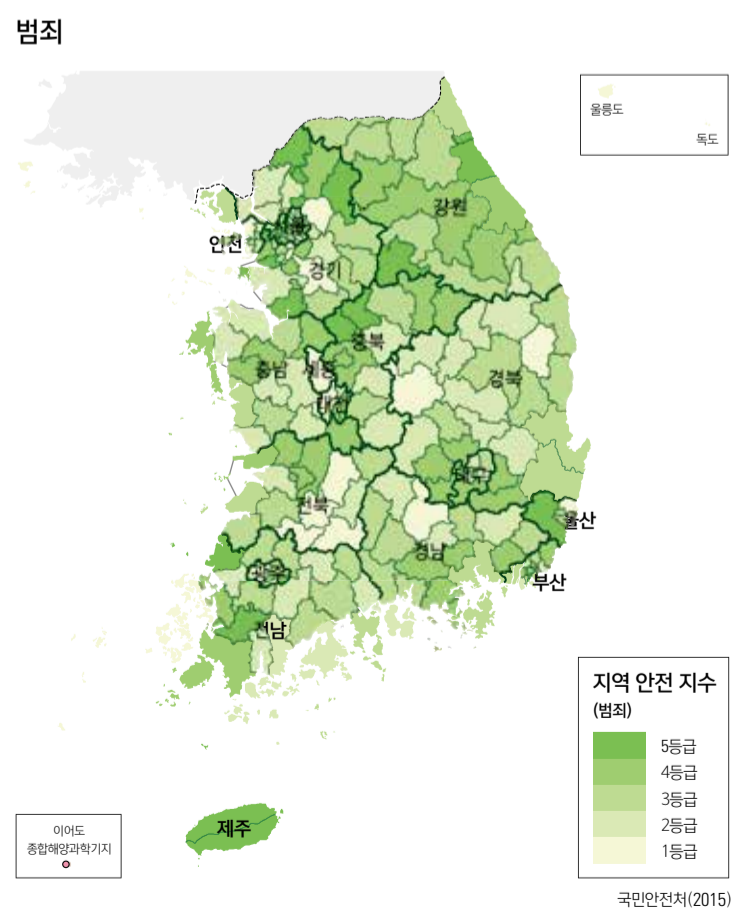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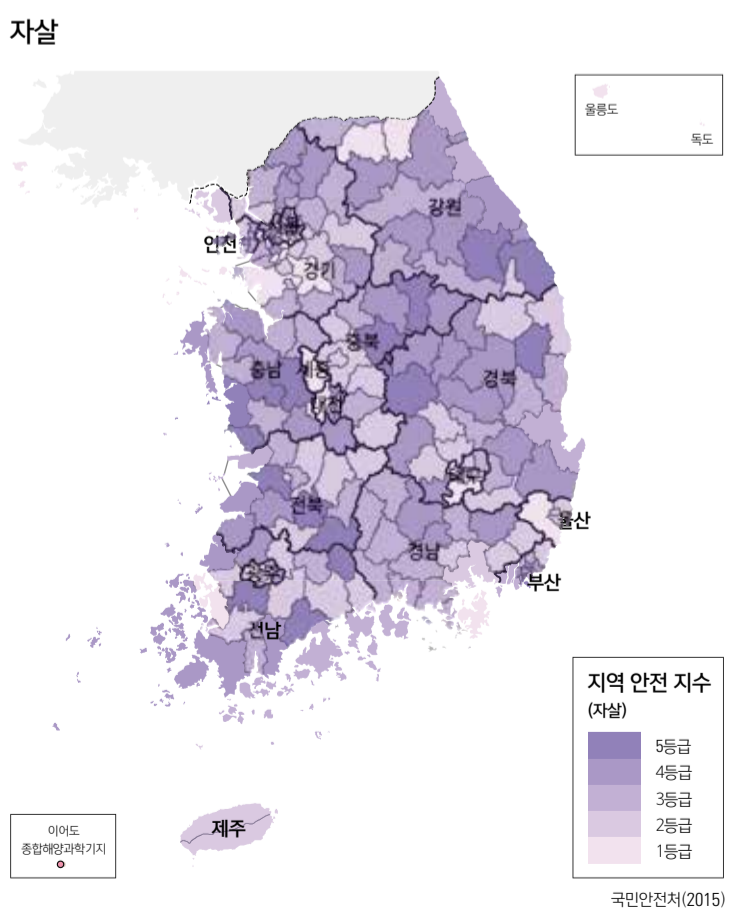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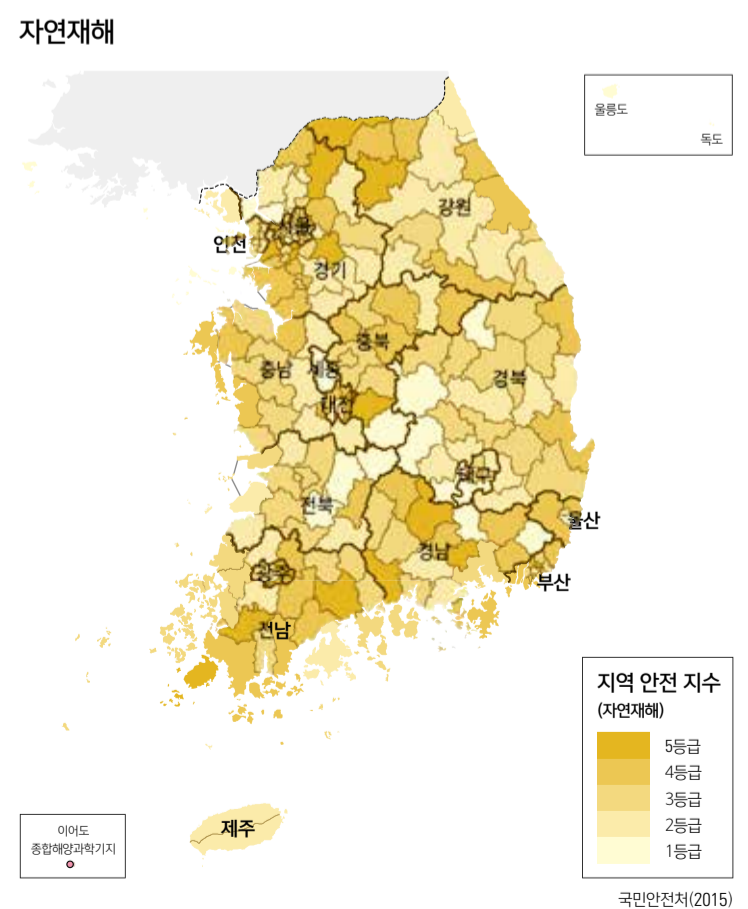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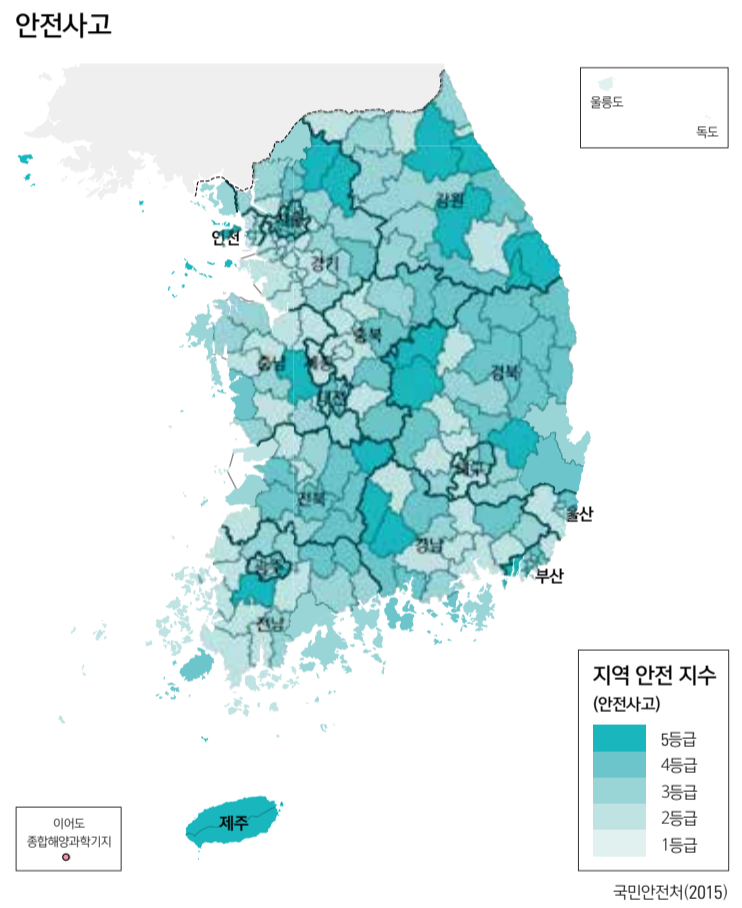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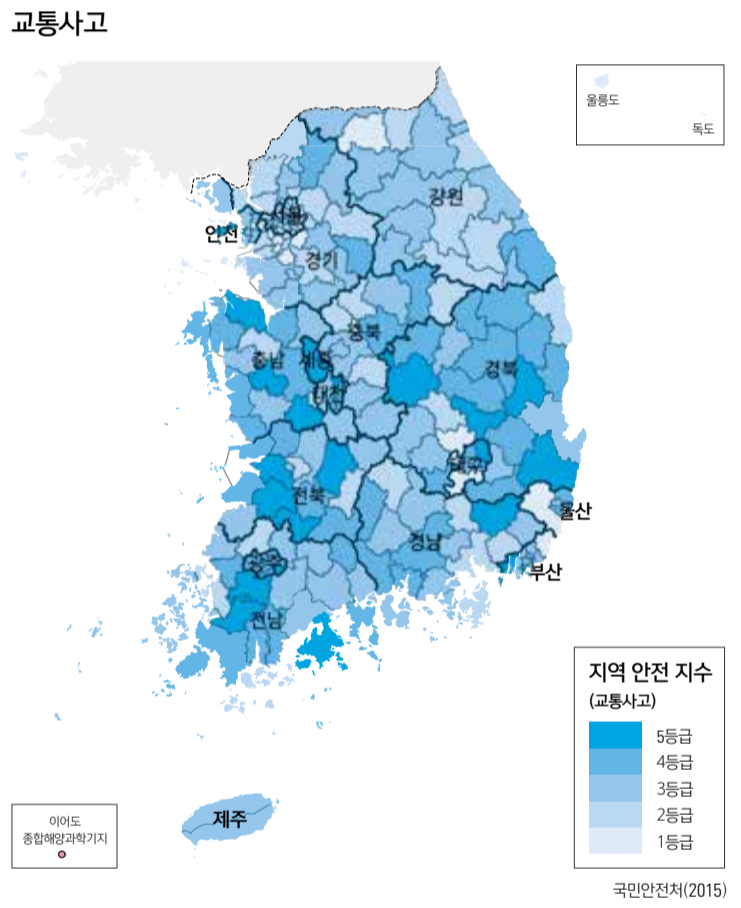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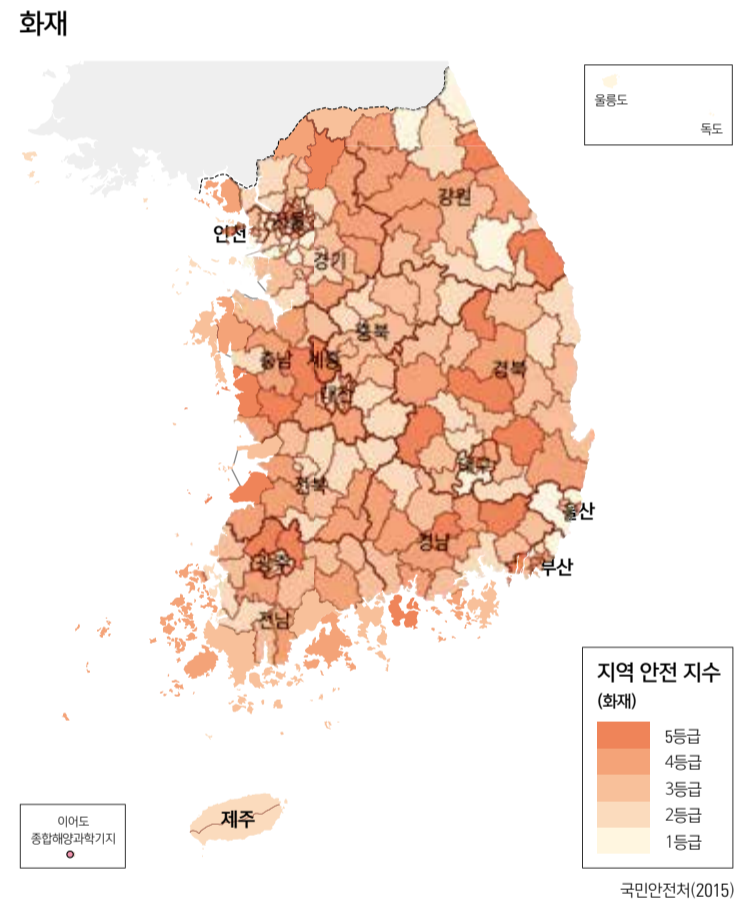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화재	서울	경기	수원, 군포,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왕	달성, 기장, 울주, 중흥, 정선, 양구, 고성, 울릉	구로, 동작, 부산북, 연수, 부평, 계양, 울산북
교통사고	서울	경기	수원, 군포,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구리	달성, 기장, 울진, 울주, 울릉, 화천, 철곡, 울릉	송파, 관진, 중랑, 양천, 동작, 강동, 부평
자연재해	세종	전북	고령, 김포, 속초, 김천, 영주, 상주, 영산	달성, 울진, 영동, 진안, 무주, 임실, 고령, 장성	충로, 성동, 강진, 마포, 관악, 대구중, 울산남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범죄	세종	전남	과천, 남양주, 의왕, 용인, 계룡, 남원, 상주	동진, 진안, 임실, 순창, 신안, 영암, 울릉, 합천	도봉, 수성, 연수, 계양, 인천서, 유성, 울산북
안전사고	세종	경기	수원, 군포,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진주	달성, 기장, 중령, 음성, 홍성, 무안, 영광, 철곡	송파, 양천, 강동, 대구서, 연수, 부평, 계양
자살	세종	경기	군포, 과천, 의왕, 용인, 화성, 계룡, 거제	달성, 울진, 울주, 중령, 화천, 양구, 무안, 울릉	송파, 관진, 서대문, 양천, 서초, 대전서, 유성
감염병	울산	경기	수원, 과천, 오산, 용인, 화성, 계룡, 거제	달성, 기장, 울주, 중령, 화천, 진천, 철곡, 울릉	송파, 서초, 인천서, 유성, 울산남·동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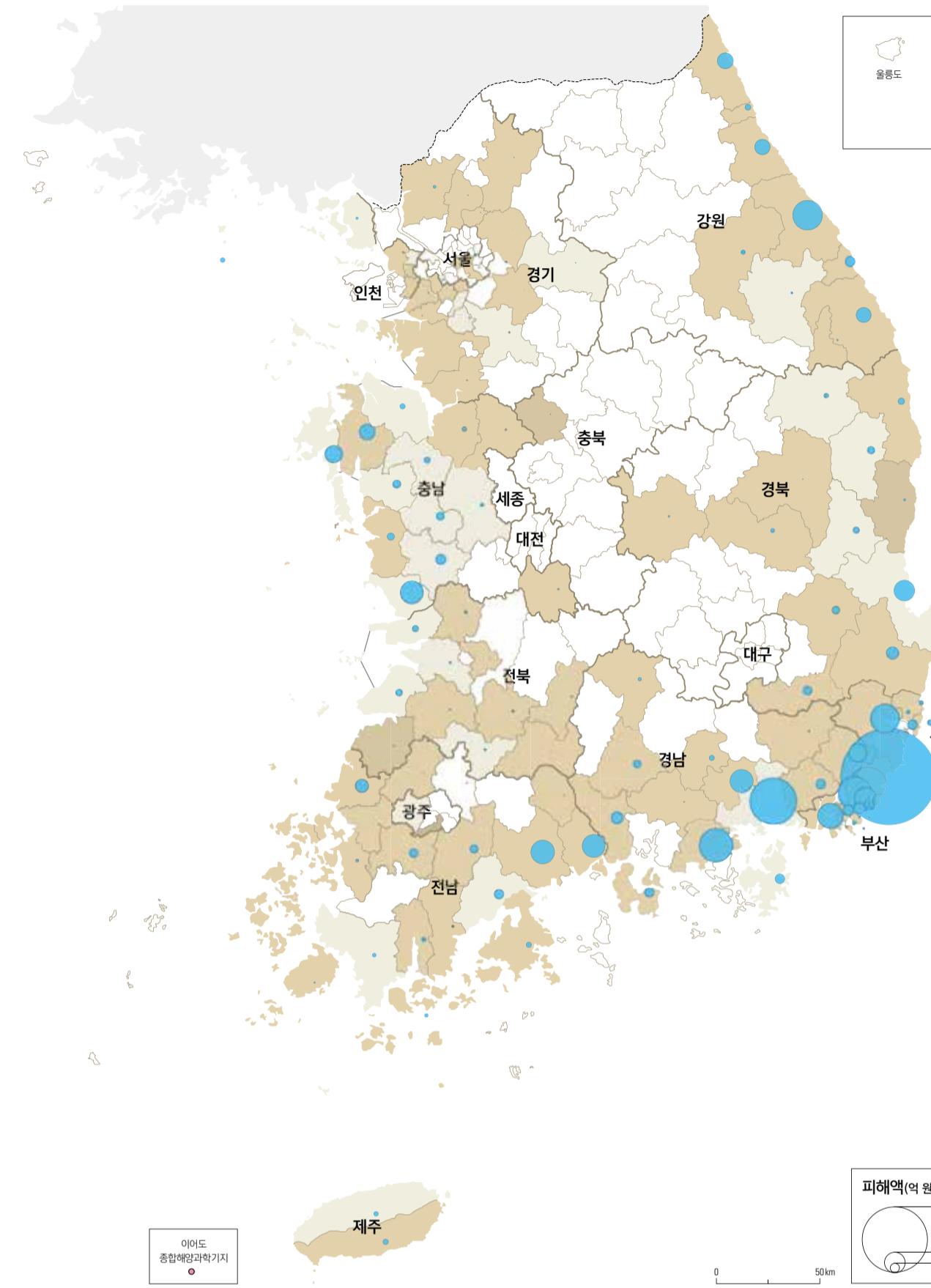


지역의 안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한 선행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안전 지수를 공개했다. 이는 국가 주요 통계를 활용해 지역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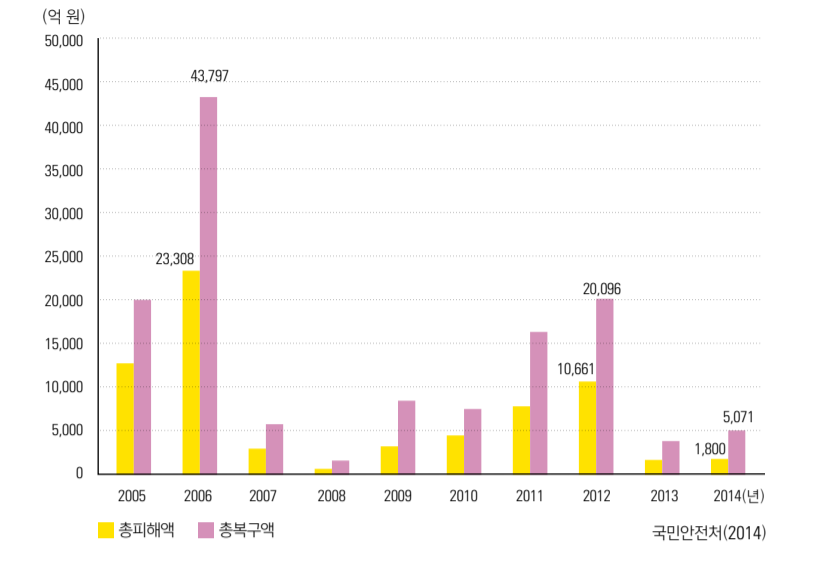
제66조를 근거로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총 일곱 개 분야에 따라 지역을 5등급으로 구분했다. 5등급 간 비율은 10 : 25 : 30 : 25 :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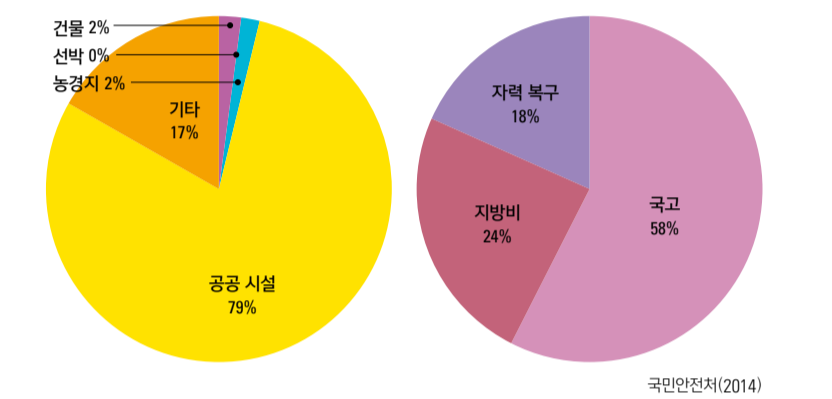
자연재해(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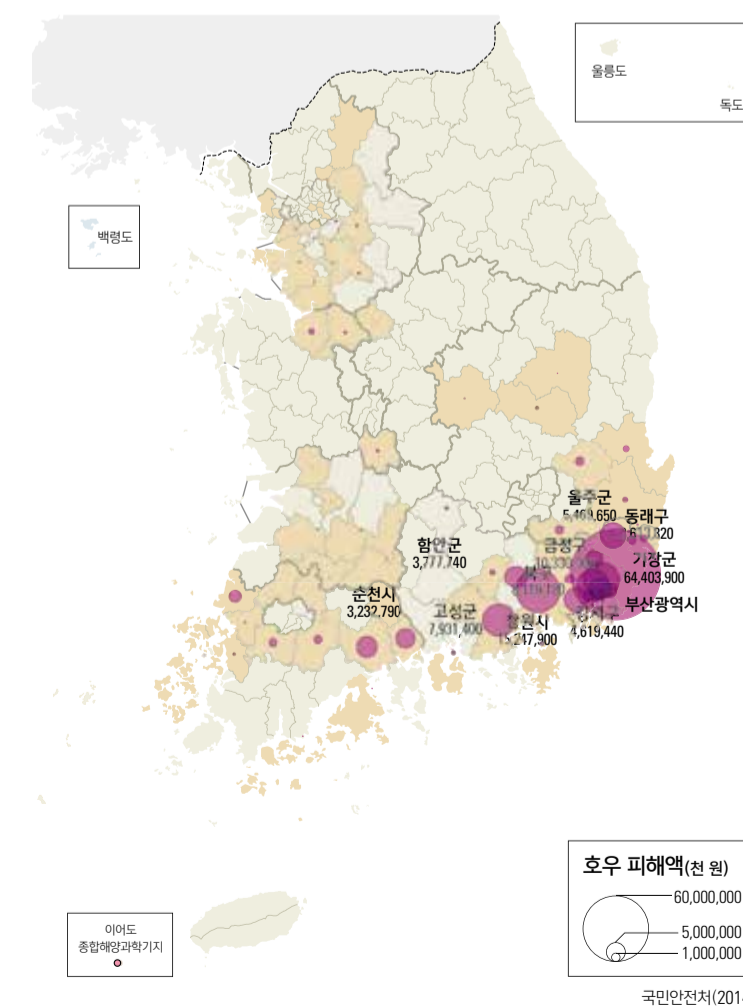
자연재해 피해액 및 복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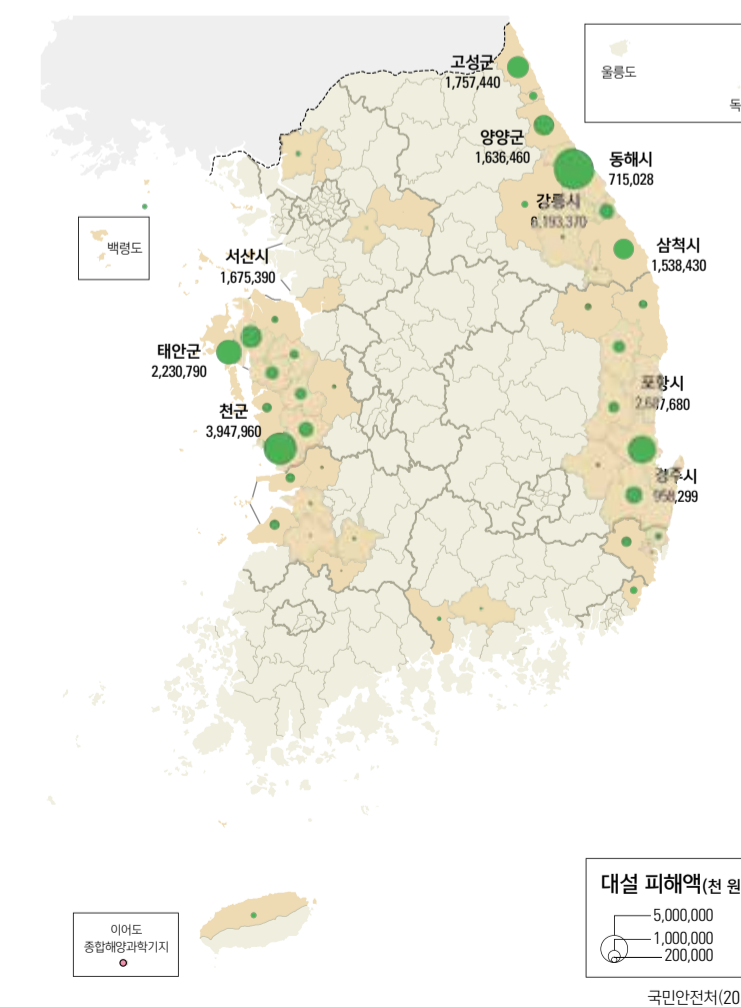
자연재해 피해 유형과 복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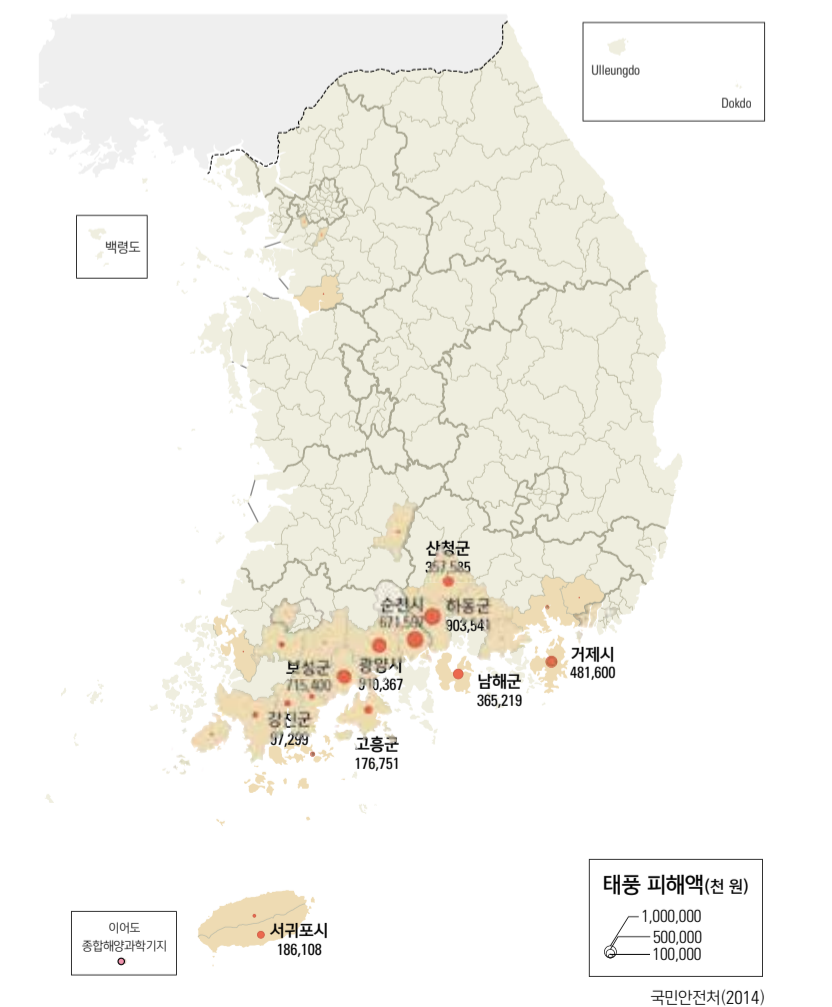
호우



대설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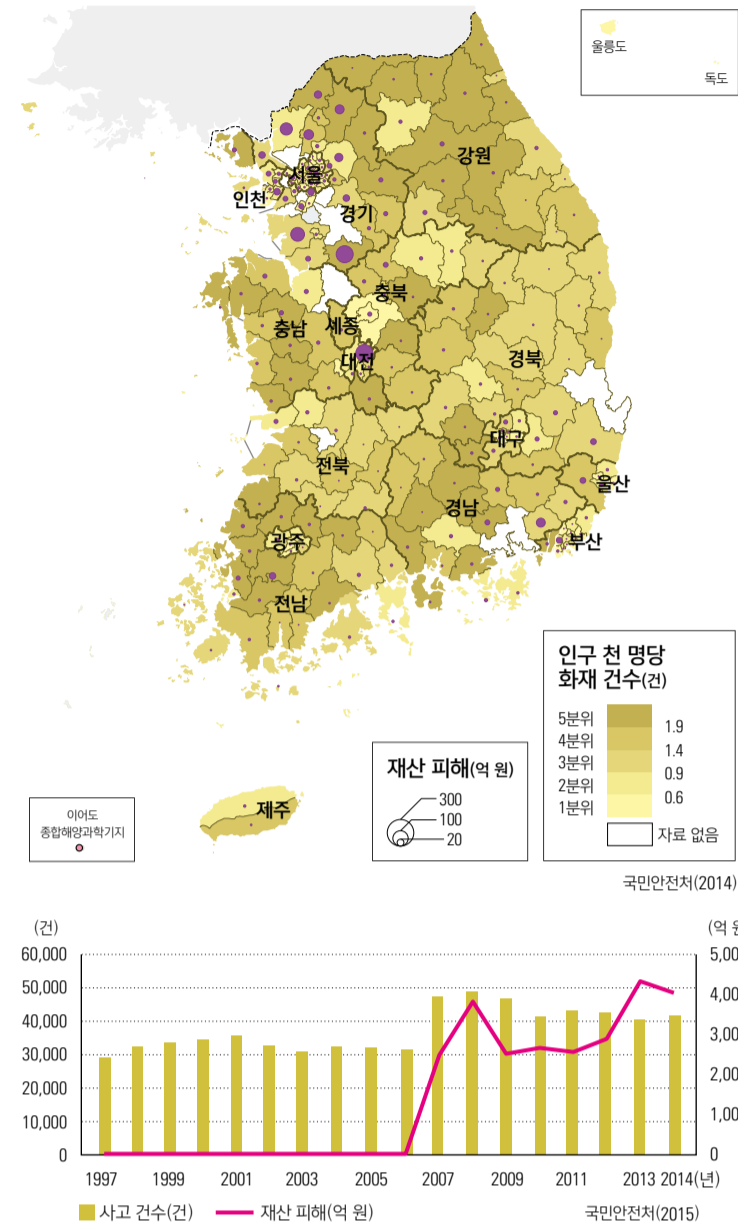
한국의 주요 자연재해는 크게 네 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4년에는 호우 15회, 대설 4회, 태풍 3회, 강풍 1회 등 총 23회의 주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호우 피해가 1,422억 원(79%)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대설(324억 원, 18%), 태풍(53억 원, 3%)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951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2%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경상남도(326억 원, 18%), 충청남도(136억 원, 7%)로 세 개 광역 시도의 피해가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은 2014년 기준 5,071억 원으로, 피해액 1,800억 원에 비해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국고(58%), 지방비(24%), 자력 복구(18%)를 통해 마련되었다.

지속 가능한 국토의 발전
안전한 국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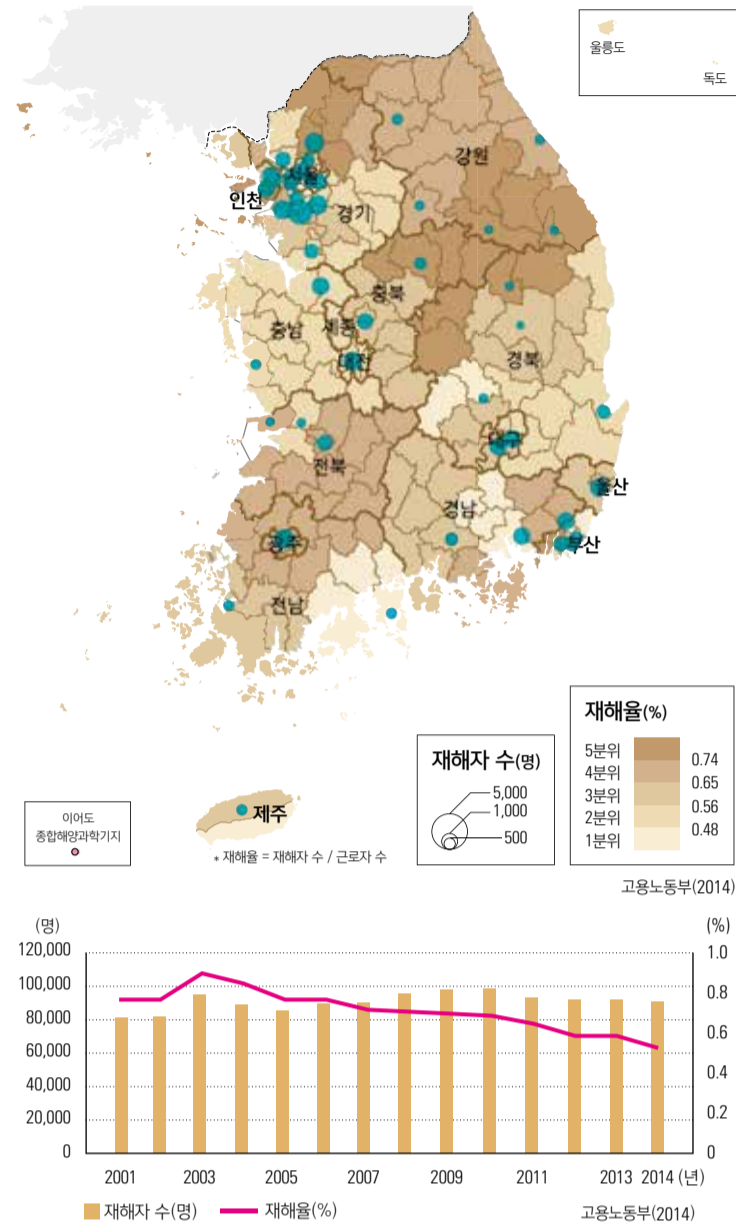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국토의 발전
안전한 국토 조성

안전 및 긴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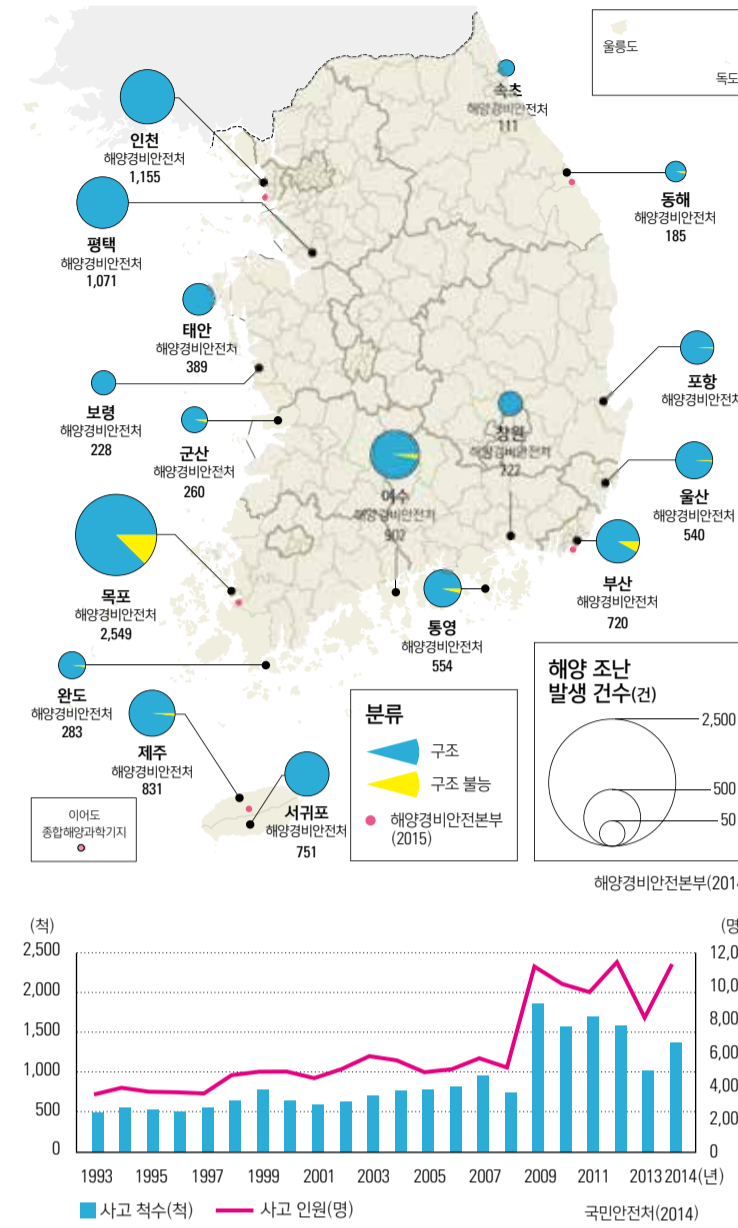
화재 피해



산업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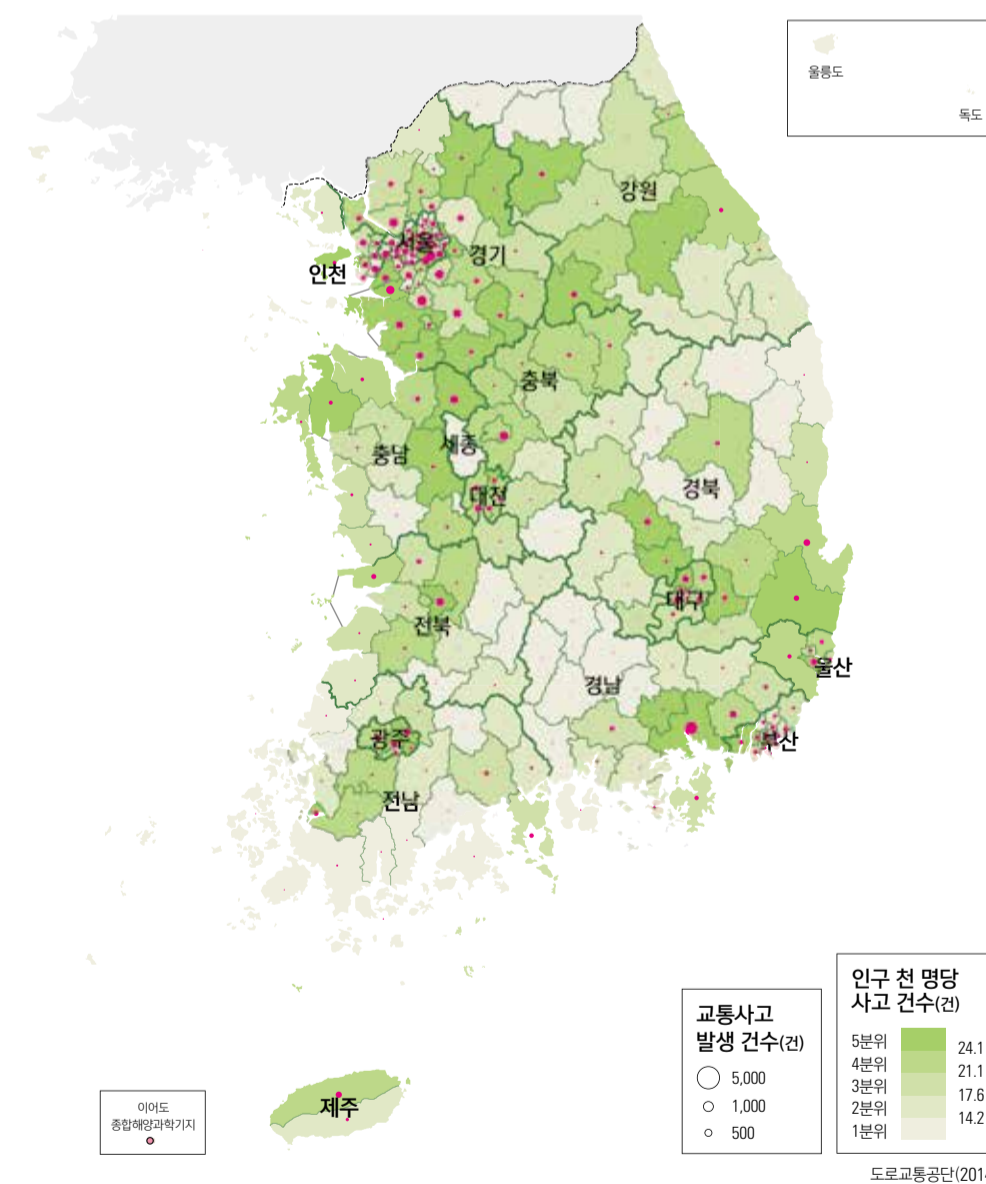
해양 조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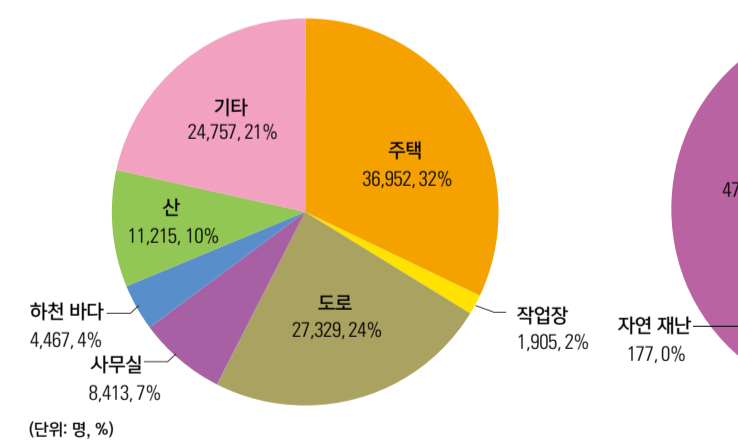
연도별 구조 활동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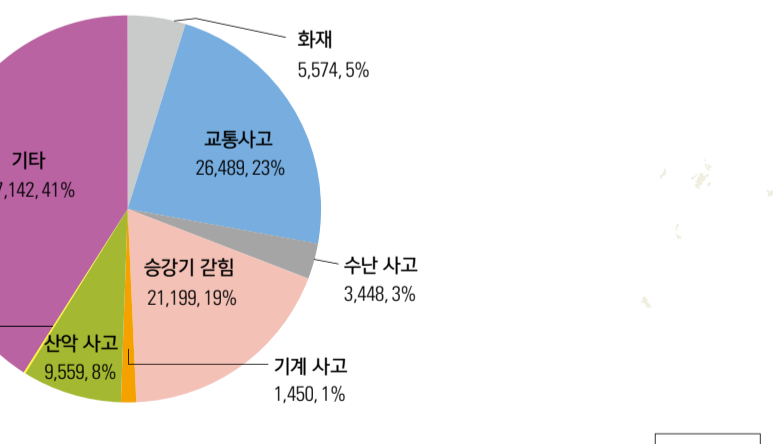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고 장소별 구조 인원



사고 유형별 구조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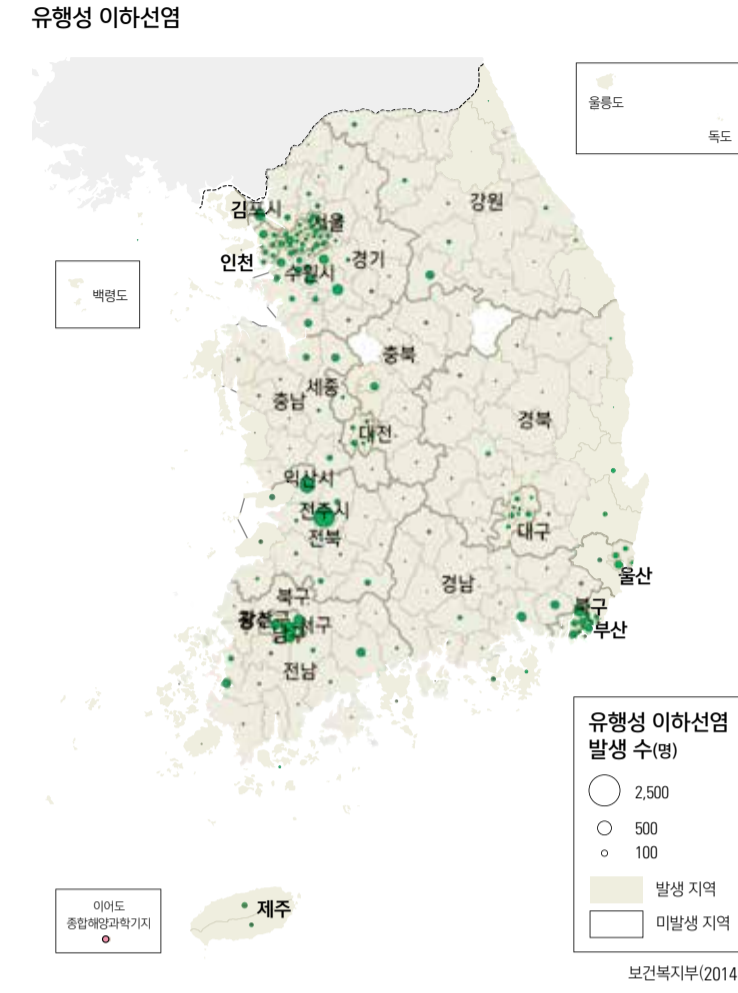


구조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구급은 응급 처치 및 이송을 뜻한다. 위 그림은 구급 구조 활동을 통해 전국 소방관서 상황실에서 119신고를 접수받아 구조대에게 출동 지령을 내려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내용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레저 활동 인구와 차량 이동의 증가 등으로 구급 구조 활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4년 기준 구급 활동으로 인한 이송 환자 수는 16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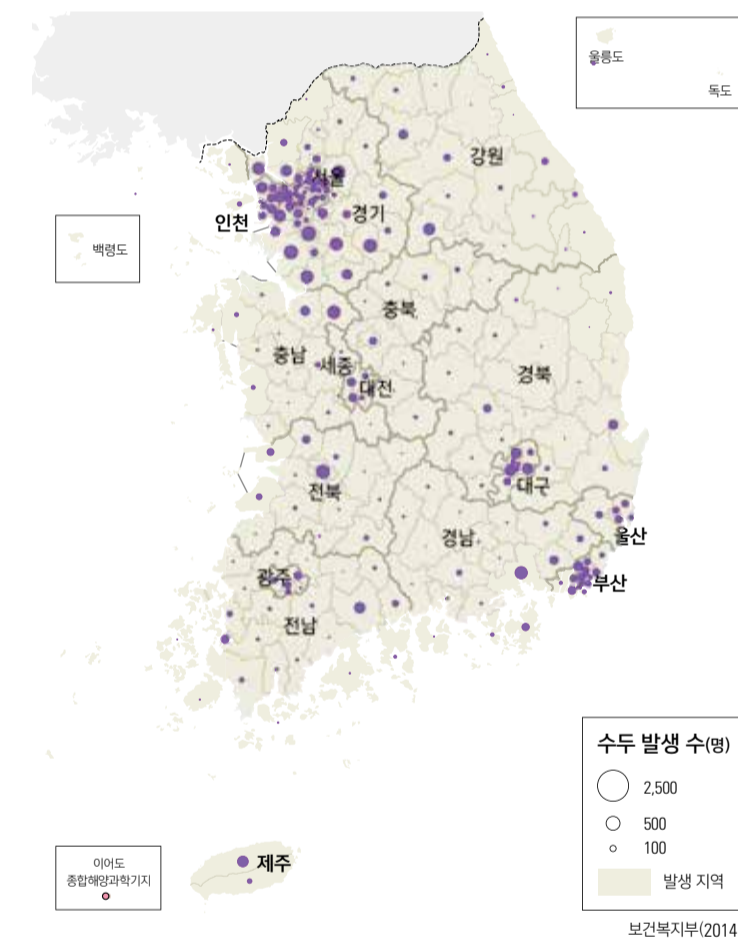
명으로 1985년의 3만 명에 비해 56배 가량 증가했으며, 구조 인원은 2014년 기준 12만 명으로 2005년의 6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사고 장소를 살펴보면 32%의 인원이 주택에서 구조되었으며, 구급 이송 실적 또한 가정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구급 구조 활동이 주로 가정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고 중별로는 교통사고가 23%로 단일 위급 상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승강기 갑힘(19%),

산악 사고(5%), 화재(5%), 수난 사고(3%)가 그 뒤를 잇는다. 연 단위의 사고 현황은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가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데 반해, 화재는 2007년, 해양 조난은 2009년 이후로 사고 건수와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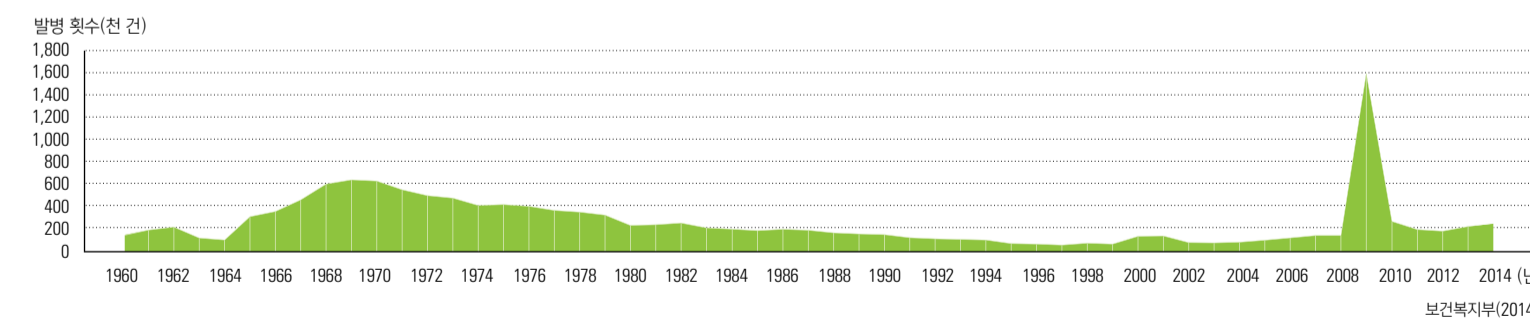
전염병 발생 수(2014년)



수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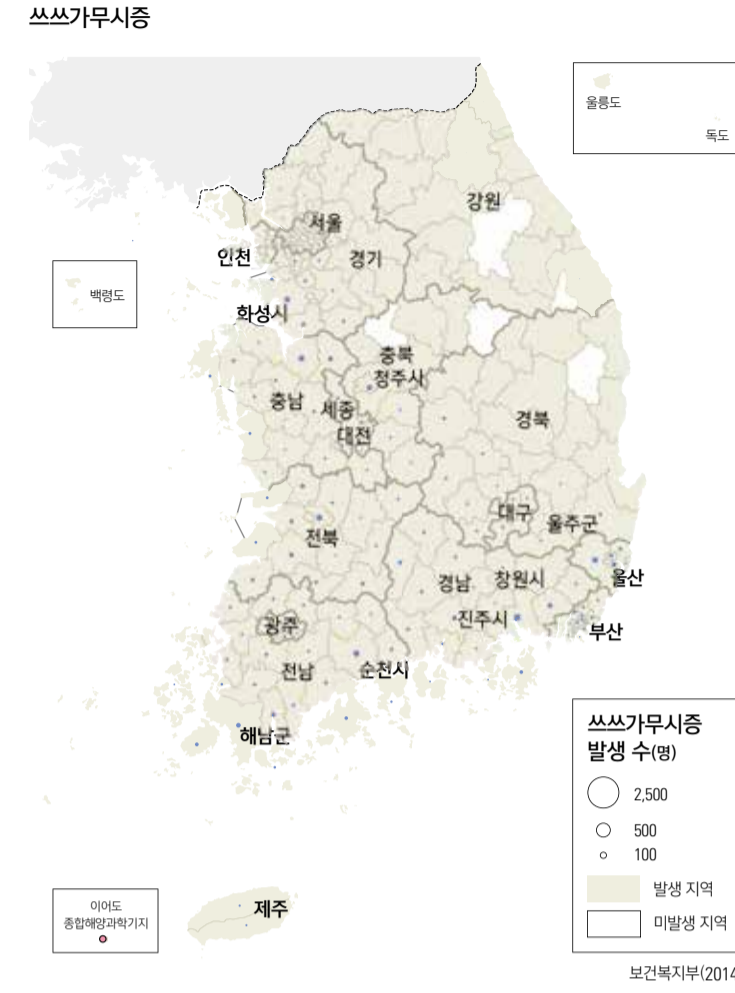


연도별 감염병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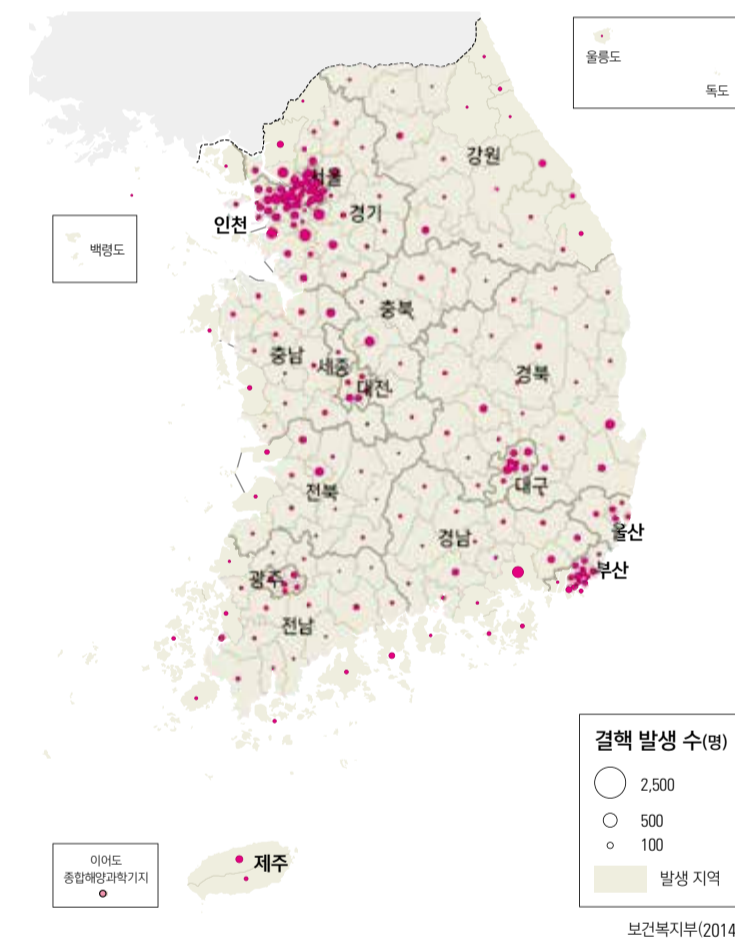


국가 간 교류 확대와 기후 변화 등으로 감염병의 세계적 순환과 국내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7N9), 중증호흡기중후군(MERS) 등의 신종 감염병 확산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주요 사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SS)을 통해 질병 발생 현황을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중 전수 감시 통계 대상인 62개 감염병의 발생 추이는 197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9년 신종플루(H1N1)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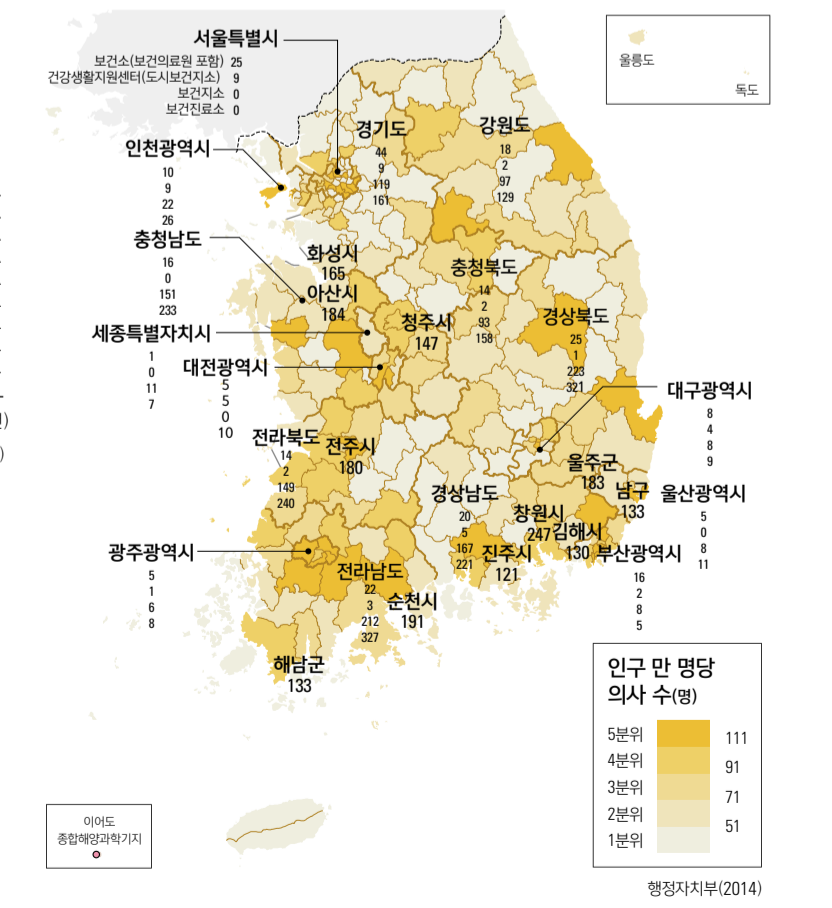
쓰쓰가무시증



결핵



의사 수



지속 가능한 국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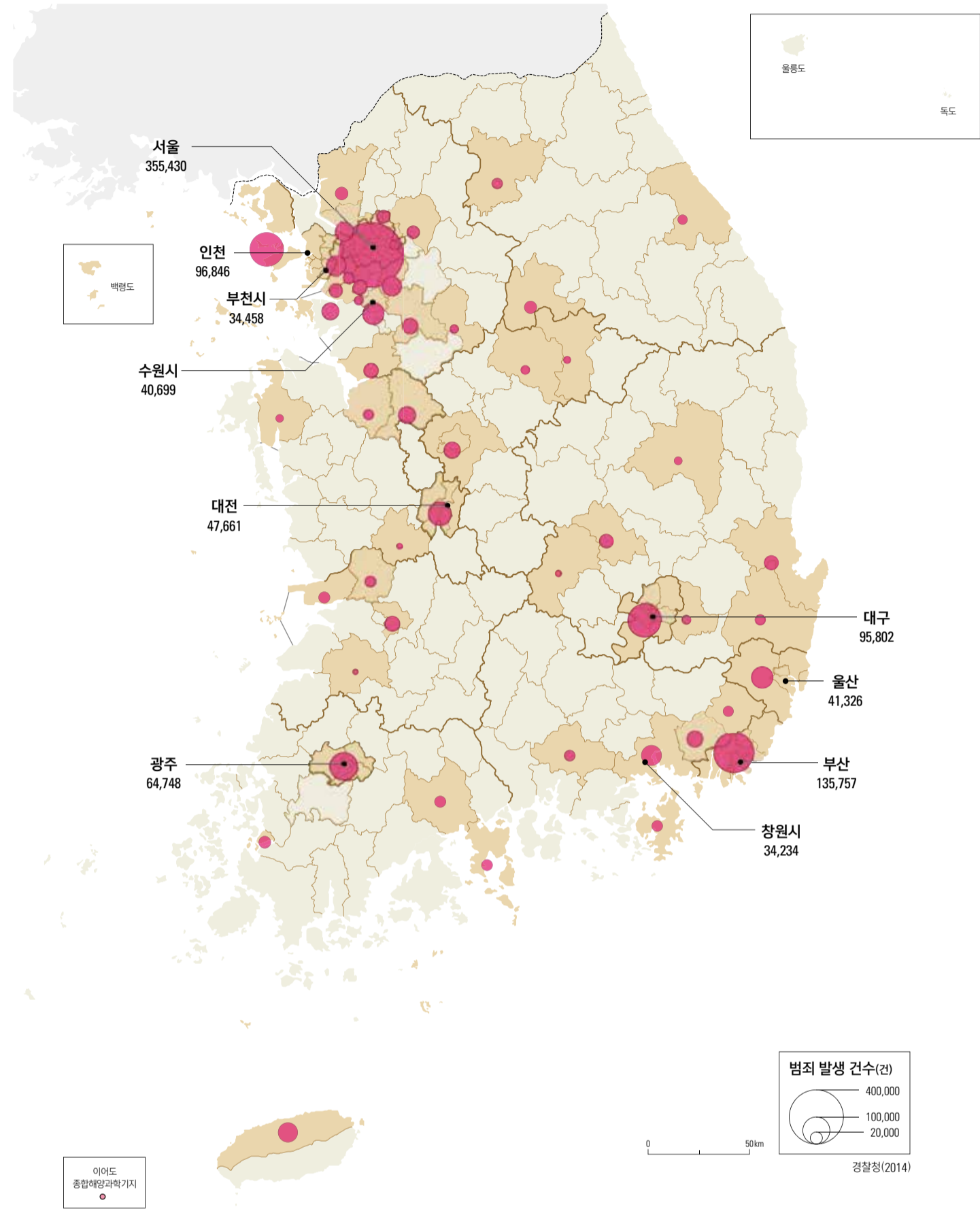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국토의 발전

안전 및 긴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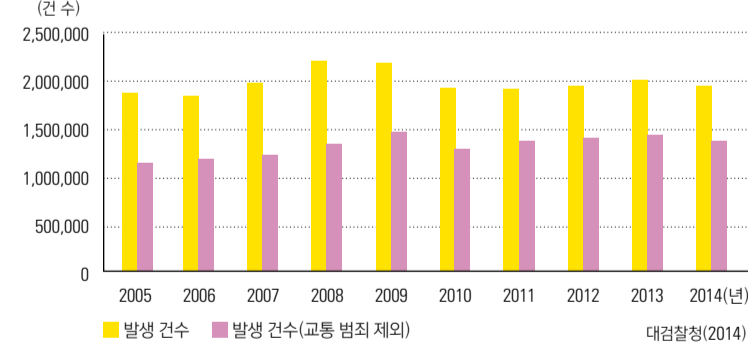
안전 및 긴급 구조

공공 안전

범죄 발생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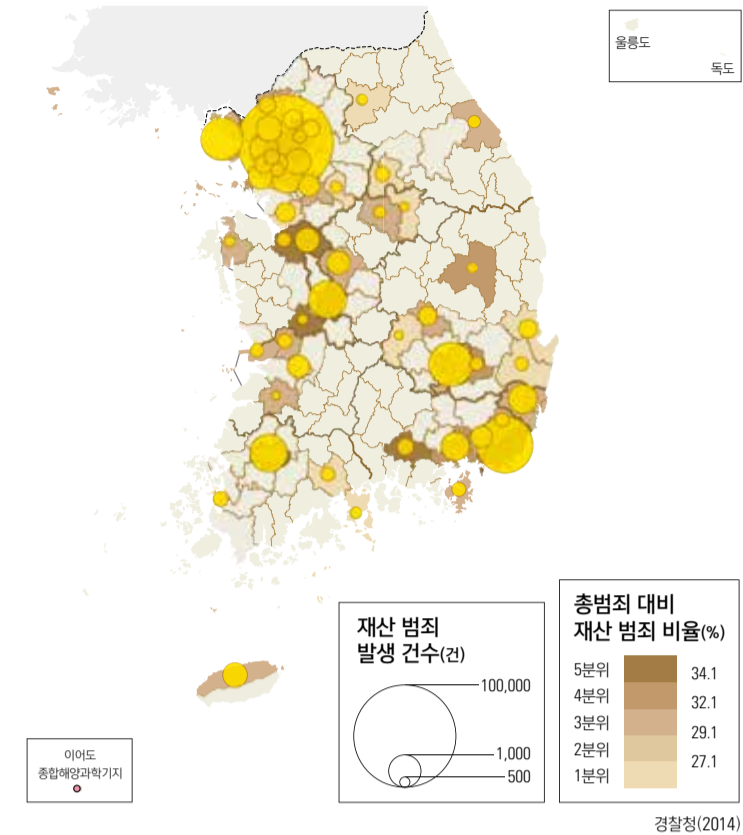


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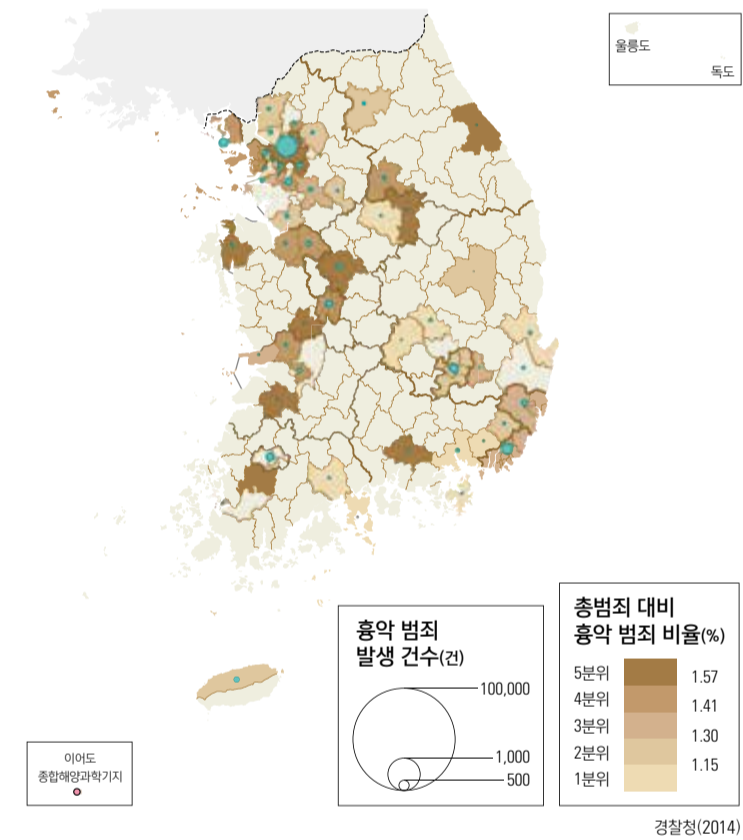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범죄의 발생 건수는 1,778,966건이며, 인구 십만 명당 3,528건이 발생했다. 주요 범죄는 크게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강력(흉악) 범죄, 흉기나 폭력 사용에 대한 폭력 범죄, 절도, 사기 등의 재산 범죄, 속도 위반, 음주 운전, 불법 주차 등의 교통 범죄 등 네 가지 형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404,390건)였으며, 서울(355,991건), 부산(133,755건)이 뒤를 따른다. 그러나 각 지역별 인구 수(십만 명)에 대한 범죄 발생 비율은 제주(5,379건), 대구(3,893건), 울산(3,61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나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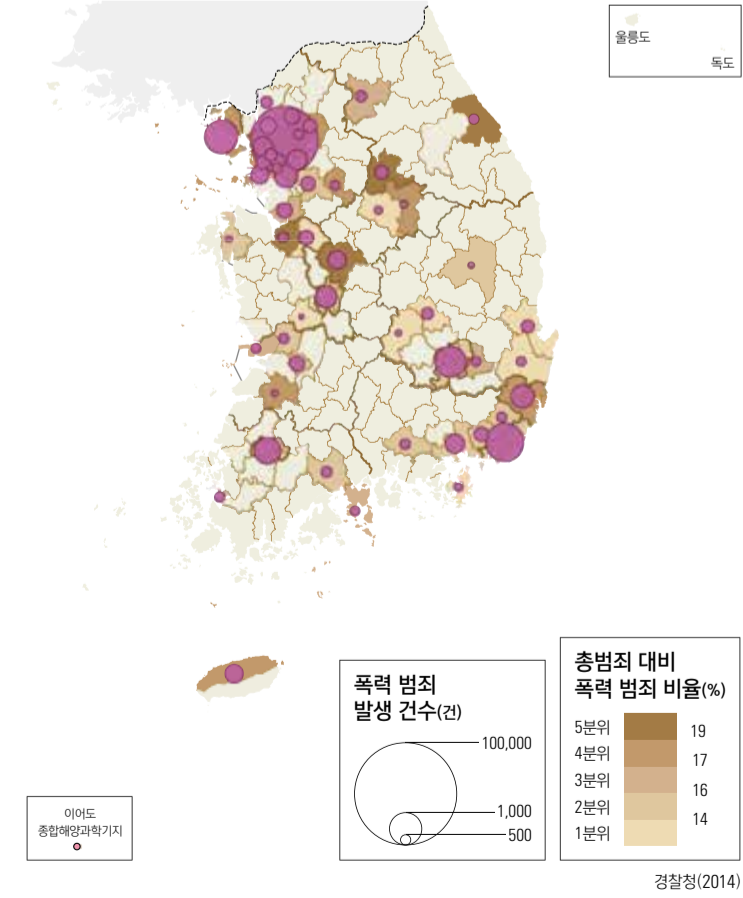
재산 범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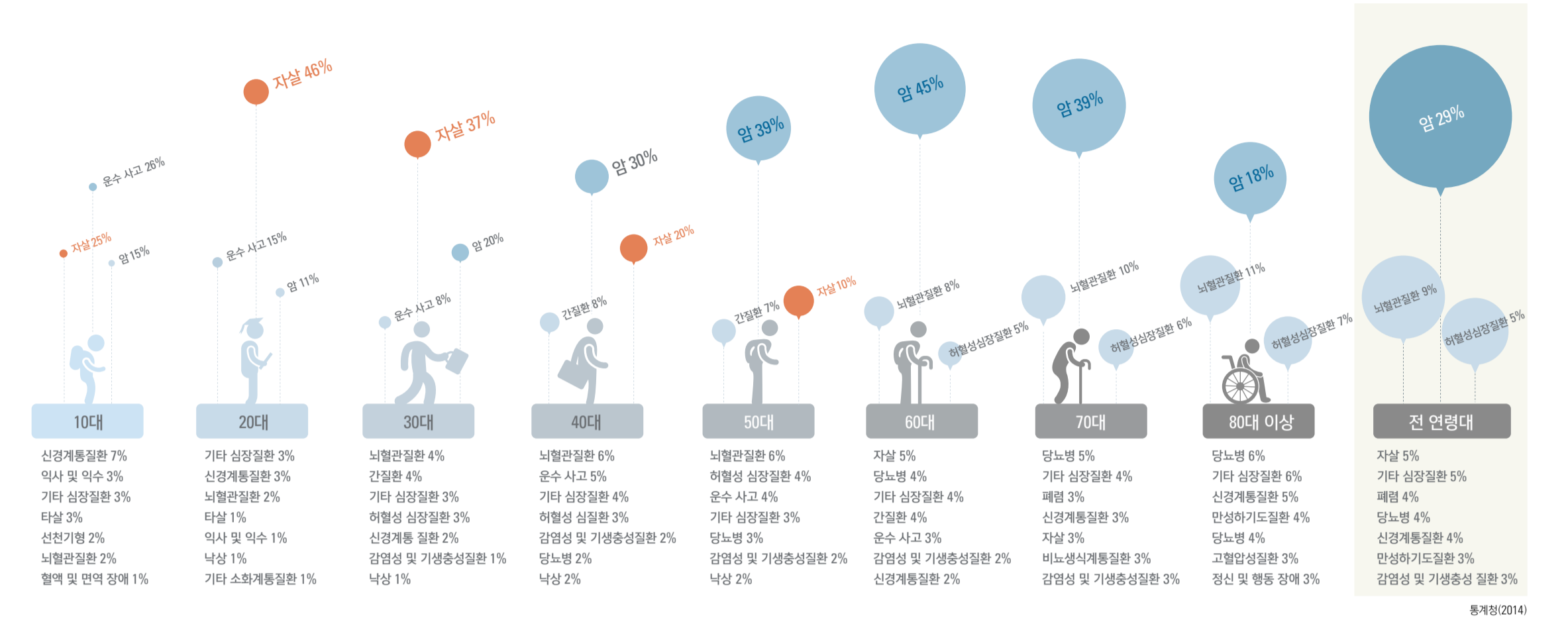
흉악 범죄(2013년)



폭력 범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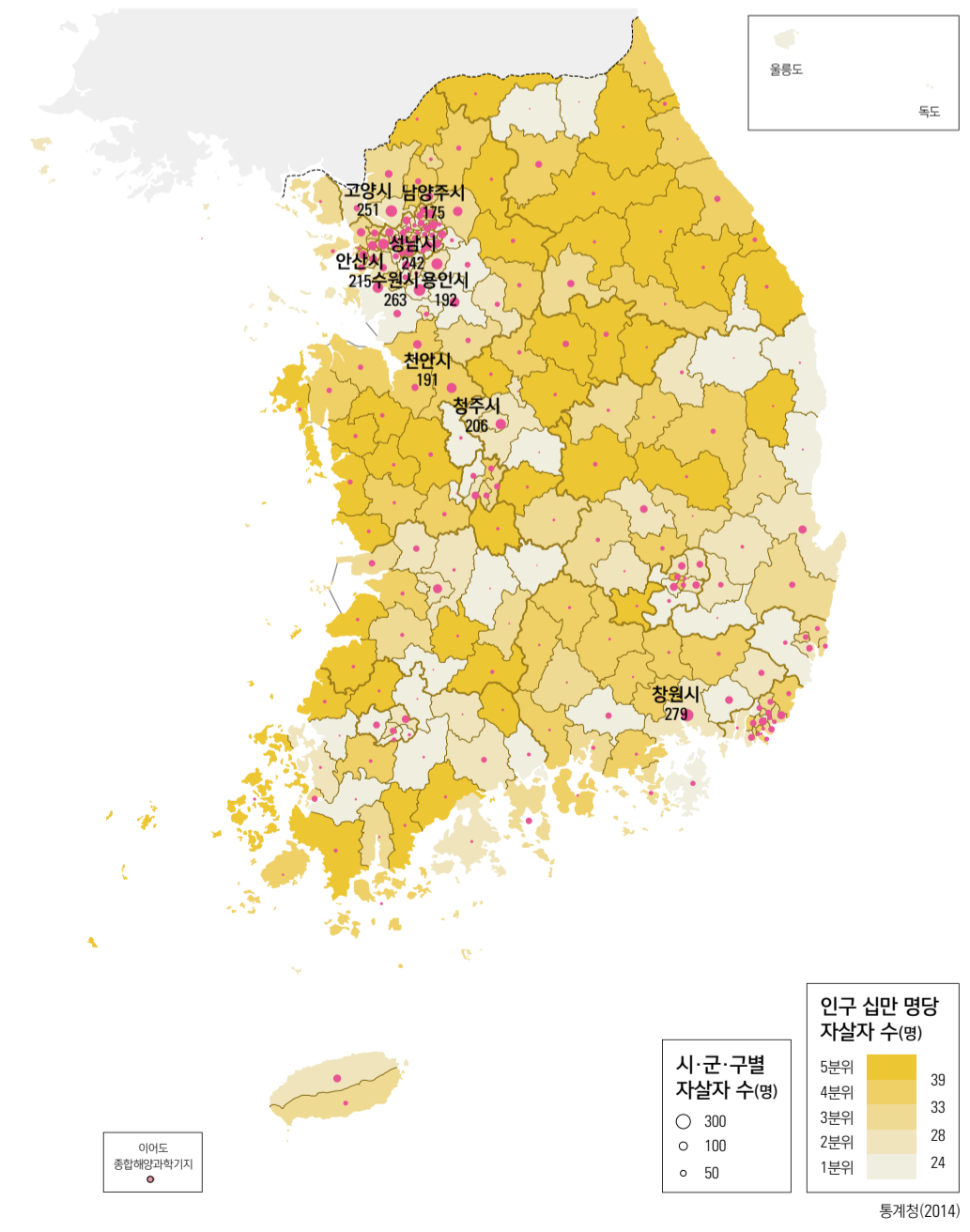


연령별 사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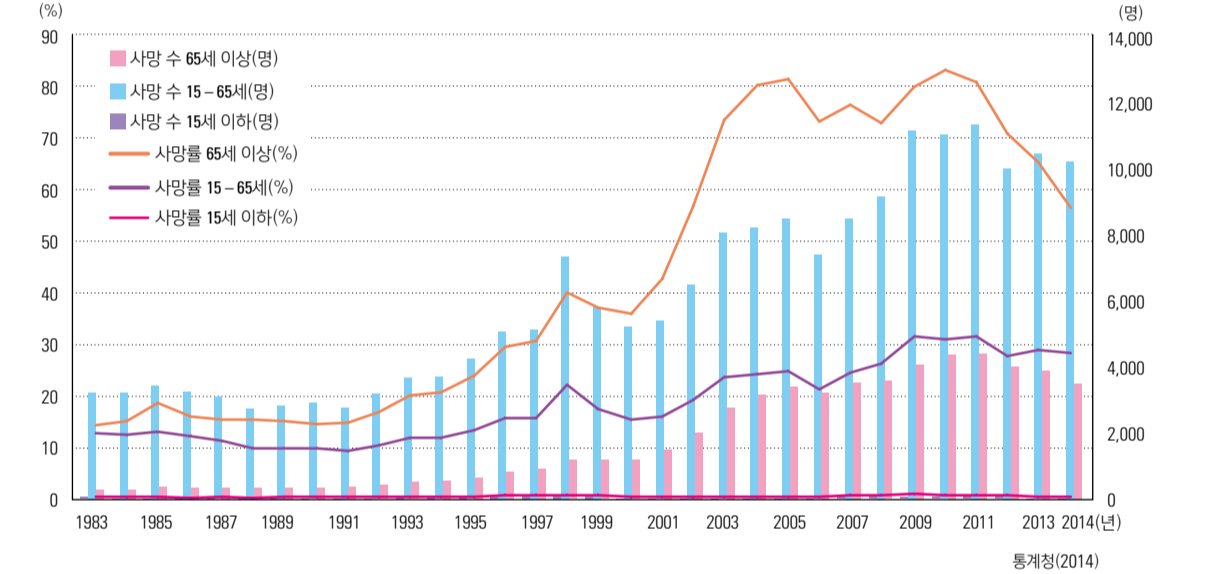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자살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충분히 인지한 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2014년 통계청 추산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은 암(29%), 뇌혈관질환(9%), 심장질환(5%), 자살(5%)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령 인구의 자살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제2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2009 - 2013년)'에 의한 국가 자살 예방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대책은 표의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이다. 또한 각 지방 자치 단체에는 자살 예방 센터 또는 정신 건강 증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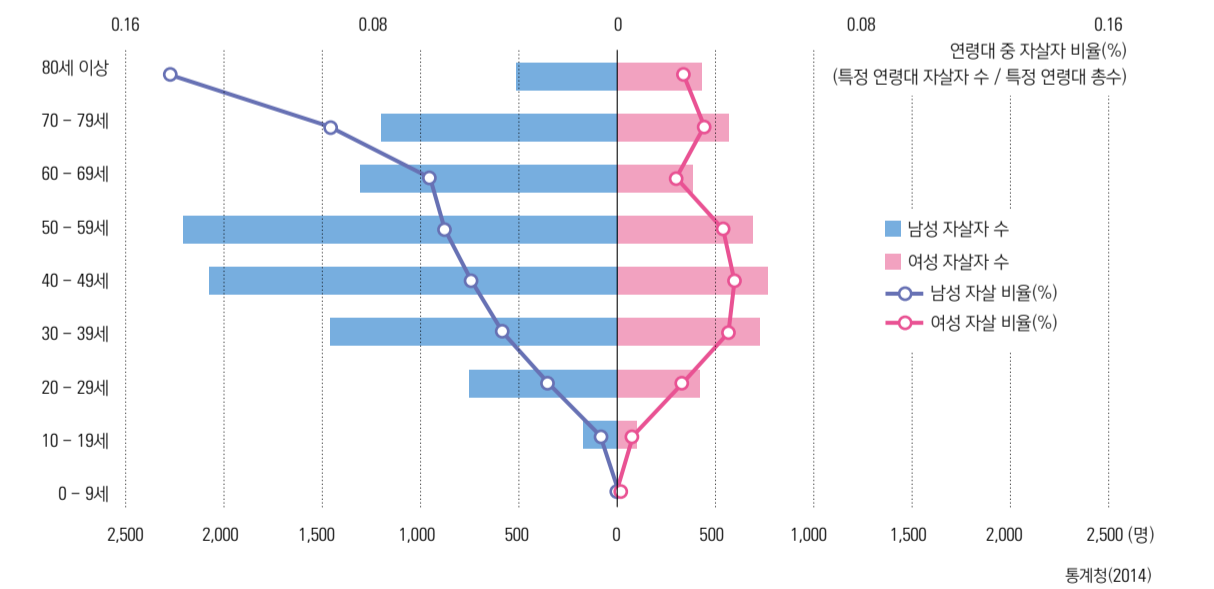
시·군·구별 자살자 수



자살 사망자 수의 변화 추이



성별·연령별 자살자 수



자살 방지 정책

10대 과제	소관 부처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2. 자살 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4. 자살에 대한 대중 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등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 보건 서비스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등
6. 지역 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 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7. 자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8.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절히 한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9.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경찰청 등
10. 국가에 기반을 둔 자살 예방 정책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등